

한국경제 저성장·분배악화의 원인과 대책*

좌 승 희** · 조 성 중*** · 이 태 규****

논문 초록

이 논문은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 현상의 원인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시장의 본질적인 기능은 경제적 성과에 따른 차별적 선택 기능인 "경제적 차별화"에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발전의 동기가 만들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현실 시장의 미흡한 차별화 기능을 보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이라는 조직이 발명되어 경제적 차별화 기능을 주도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그리고 정부가 이러한 시장과 기업의 차별화 기능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농경사회의 경제 정체를 극복하여 고차원적인 경제발전 현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과 분배를 주도하는 핵심 주체로서, 기업의 성장은 경제성장과 분배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명제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런 가설을 세계경제와 미국경제에 대해 검증한 저자 좌승희의 전작(前作)들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에 대해 검증하였다. 저성장·양극화 현상은 모든 경우 기업이 아니라 경제적 차별화 원리에 역행하는 정부의 반 기업 정책과 복지국가 형 재분배 정책에 기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동안 경제 불평등이 기업과 시장의 책임이라는 국내외 자본주의 비판가들의 주장은 지지되지 않았다.

핵심 주제어: 경제발전의 일반이론, 자본주의 기업경제, 한국의 저성장과 분배악화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B4, C5, D3, O1, O43, O47, P1

투고 일자: 2025. 3. 31. 심사 및 수정 일자: 2025. 4. 21. 게재 확정 일자: 2025. 4. 25.

* 익명의 두분 논문심사위원들의 유익한 논평에 대해 감사 드린다. 그리고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세미나와 한국제도경제학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초고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참석자들과 감사사를 드린다.

** 제1저자/교신저자,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경제학 박사/한국제도경제학회 이사장, e-mail: jwa4746@naver.com

*** 공동저자, 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e-mail: sungjongc@gmail.com

**** 공동저자,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e-mail: tklee@fki.or.kr

1. 서론: 저성장·양극화 함정에 빠진 세계와 한국경제

20세기 마지막 4반세기 이후 세계는 저성장·양극화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강력한 회복기를 거친 후 60~70년대부터 전 세계가 저성장·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다. 더구나 곤혹스러운 것은, 2차대전 이후 경제 평등을 부르짖는 사회주의의 이념이 창궐하면서 선진국들은 이에 대응한다고 영국은 복지국가 이념, 유럽은 사회민주주의의 이념, 그리고 미국은 소위 수정자본주의의 길로 나아갔으며, 전후 많은 신생 독립국들은 아예 사회주의를 채택하여, 너도나도 재분배복지정책을 포함하는 각종의 소득분배 개선 정책들을 시행하였음에도 이런 역 주행 현상에 부딪혔다는 점이다. 경제적 평등을 실현한다고 너도나도 소위 경제는 물론 지역 간 균형 발전 정책을 열심히 시행하였으나, 결과는 모두 잘 사는 경제는 고사하고 원치도 않았고 목표하지도 않았던 저성장 속의 양극화라는 난제에 부딪친 것이다. 학계는 이러한 전후 수정자본주의 흐름을 일반적으로 케인즈 주의와 동일시하거나 혹은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시장 자유를 규제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관심이 “내장된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 (Harvey, 2005)”라 부르고 있다.

다행히도 한국은 해방 이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고수하여 60~70년대 한강의 기적에 이어 80년대까지 소위 개발연대라는 고속 성장 속에 분배마저 개선되는 세계 최고의 동반 성장 경제를 실현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후 정치 민주화가 되면서 90년대 들어서부터 성장추세가 지속 하락하고 분배마저 악화되는 현상이 이어져 왔다. 오늘날 중진국함정을 겨우 극복하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고는 하나, 저성장과 분배 악화라는 세계 경제의 보편적 악성 유전자(meme)가 빠른 속도로 한국경제에 전염된 듯하다.

사실상 그 동안 경제 평등 이념의 실현을 위한 재분배 복지정책 처방자 역할을 해 온 경제학계는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 답이 없다. 자본주의 경제의 기업이 바로 노동자 착취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칼 마르크스의 이념을 따르는 일부 좌파 학계는 양극화는 자본주의 경제의 태생적 한계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한 적극적 반시장적 개혁, 특히 재분배정책의 강화만이 해결책이라 주장한다(Piketty, 2014). 이들 중 일부 케인즈 주의자 혹은 내장된 자유주의자들은 60~70년대 영미 중심으로 선진국의 경제 난국을 타개한다고 대처 수상과 레이건 대통령 등이 주도한 시장중심의 신 자유주의 정책이 바로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계에서 결정적인 경험은 1970년대 미국과 영국의 성장 둔화에 대한 공황적 반응으로서 성장 둔화는 불평등을 낮추기 위한 제도(최저 임금, 노동 조합, 세금, 규제 등)들이 원인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적 부의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축적을 찬양하는 기업가 문화를 풀어 놓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를 레이건-대처 혁명으로 알고 있으며, 그것은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국가 내 불평등의 현기증 날 정도의 확대의 시작점이었다. 중국과 인도와 같은 국가에서 국가 통제가 (성공적으로) 완화되어 민간 부문 주도의 성장을 허용했을 때, 불평등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같은 이념이 불러 나왔고, 그 결과 인도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중국은 곧 그 수준에 도달할 위험이 있다.”(Banerjee and Duflo, 2022).

그러나 신 자유주의를 주도한 하이에크(Hayek)나 프리드만(Friedman) 류의 자유주의 경제학계는 이런 비판에 묵묵부답이다. 신 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케인즈 류의 주류 경제학계는 오늘날의 장기 저성장·양극화 현상은 아마도 세계경제의 새로운 정상 상태일지도 모른다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Summers, 2014, 2016).

이런 경제학계의 혼란 혹은 무관심 속에서 인기를 얻는 주장은 Piketty(전게서)와 같이 여전히 자본주의 비판론에 바탕을 둔 재분배 복지국가 이상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기업으로 상징되는 자본가 부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받아 가난한 계급에 재분배하는 길밖에 없다는 정치적 포퓰리즘이 이에 가세하여, 지금 세계는 사회주의·공산주의는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주도 이념인 경제평등주의가 전 세계 자본주의를 뒤덮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칼 마르크스의 반 시장·반 기업적 이념은 공산권의 몰락으로 왜소화되기보다는 오히려 다수 대중의 지지하에 전 세계의 주도적 세계관으로 자본주의 사회에 공고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여기에는 그 동안 지속되어온 저성장·양극화 현상이, 그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도 없이,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일찍이 1848년 공산당 선언에서 “*사회주의 유행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이 유행은 모든 유럽 국가들의 근대적 권력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다.*”고 당시의 유럽의 상황을 지적했으나, 오늘날에는 “*사회주의의 조상인 경제평등주의 유행이 전 세계를 배회하고 있으나 아무도 두려워함이 없이 환영하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런 배경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시장 이념을 크게 훼손하여 민주주의 미래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무력 혁명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사회민주주의를 뛰어넘는 제2의 사회주의 혁명도 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미국 등

지에서도 우려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로까지 번지고 있다. 오래 전에 이런 우려를 적극 표명하면서 사회주의 시대의 도래를 점쳤던 Schumpeter (1950)가 지하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더구나 아직도 중국식 사회주의를 고수한다는 중국은 미래는 중국의 시대가 필연이라고 내심 반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21세기 초엽의 이 모든 세계사적 대혼란이 결국은 경제학의 미력 함에서 온다고 믿는다. 경제학은 아직도 빈부의 격차 없이 모두 잘 사는 세상에 대한 해답을 못 찾고 있다. 이는 20세기 초 이승만의 딜레마이기도 했다(이승만, *공산당 당 부당*, 1923). 이승만은 근대적 민주주의가 계급 없는 만인 평등의 사회를 실현하기는 하였으나 빈부의 격차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직시하였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의 농경사회의 극 빈곤에서 탈출하여 자본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유사 이래 처음으로 소득 증대를 수반하는 경제발전 현상을 경험하였다. 이를 통해 사농공상의 농경사회 계급 이념, 혹은 반상의 차별을 없이 하여 민주주의 시대마저 열 수 있었다. 공산주의라는 전체주의 이념의 도전을 극복하고 대 다수의 인류는 오늘날 자유시장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하향 평준화된 농경사회를 벗어나 소득이 증대하면서 역설적으로 소득 불평등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나고,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에 대한 욕구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여기에 일인 일표의 보통선거에 기반한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가 보편화되면서 국민 대중의 평등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어필하는 사회가 되었다. 오늘날 어느 나라든 민주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대중의 경제적 평등 이념에 그럴듯하게 영합하여 정권을 쟁취하고 유지할 수 있느냐가 되었다. 그러나 경제학은 경제의 성장과 민주주의의 보편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멸되지 않는 빈부의 격차, 보다 일반적으로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경제의 성장과 분배 문제는 아마도 지난 반세기 세계 경제학계의 가장 뜨거운 관심 대상이 아니었나 싶다. 그러나 답은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제 불평등 문제에 대한 비법이 바로 한반도의 남쪽 대한민국에서 발명되었음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박정희 시대 한강의 기적은 오 천년 가난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산업 대국,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았음을 자랑한다. 그러나 더욱 빛나는 것은 오늘날 전세계가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저성장·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여 60년대-80년대에 걸쳐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을 실현하였다는 점이다(World Bank, 1993; 좌승희, 2014). 이승만 대통령의 딜레마를 박정희 대통

령 시대가 해결한 셈이다. 이제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경제의 고민인 저성장·양극화 문제의 해법 또한 한국이 혹은 한국경제학계가 제시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운명적 당위성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저자 좌승희는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Jwa, 2017a, 2017b, 2018, 2024b; 좌승희, 1975, 2014, 2020, 2021a)와 동시에, 국제 자료와 한국경제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결과(Jwa, 2017a, 2024b; Jwa and Lee, 2025)를 발표해 왔다. 국제 자료를 이용한 실증 연구 결과는 세 가지인데, 2개는 60여 개국 이상의 2005~2013년과 2006~2013년 간 횡단면 자료 분석이고, 세 번째는 미국의 50년대 이후 시 계열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다. 여기서는 선행 연구로서 논의의 전개상 필요한 요점만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세계 횡단면 자료 분석은 양극화 논쟁의 중심에 있는 기업 부문과 재분배복지 제도의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흥미롭게도 소득분배를 악화시킨다는 비판의 중심에 있는 기업 부문의 성장은 경제성장과 시장소득분배에 다 같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반면에, 가처분 소득의 분배를 개선한다는 재분배 복지 재정지출은 역으로 경제성장과 시장소득분배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전개된 논쟁이 현실과 괴리 되었음은 물론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해온 기업규제와 재분배 강화정책들이 오히려 성장과 분배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나아가 미국의 시계 열 분석 결과도 이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아, 신 자유주의 시대를 전후하여 다소의 구조 변화가 있었지만 대체로, 기업의 성장은 소득 성장과 시장 소득 분배 개선 모두에 기여하는 반면, 소득재분배정책은 성장과 시장 소득 분배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이 수행된 한국경제에 대한 분석도 후술하겠지만 세계나 미국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21세기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기업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개선하는 동반성장의 추진 주체이지만 재분배복지제도는 오히려 성장과 시장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그 동안 이상의 연구들에서 여러 갈래로 나뉘어 발표된 한국의 저성장·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 유기적으로 논의함과 동시에 한국에 대한 정책개선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다음 제Ⅱ장에서는 자본주의를 시장 경제라 하지만 오히려 기업 경제라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주장과 논거를 제시한다. 제Ⅲ장에서는 기업이 자본주의 기업 경제의 생산과 분배 문제 분석의 무대 뒤로 사라진 현실과 그

문제점을 지적한다. 제Ⅳ장은 본고의 이론적, 실증적 분석의 기초가 되는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새로운 이론을 그 주요 내용 중심으로 요약 소개한다. 특히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분석 이론을 소개한다. 제Ⅴ장은 이 이론에 기초하여 자본주의 기업 경제의 거시경제 성장 및 분배 결정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한다. 제Ⅵ장은 지난 60년 한국의 정치경제체제변화에 따른 성장·분배 구조의 변화를 개발 연대와 민주화 연대 그리고 좌우파 정권 별로 실증 분석한다. 제Ⅶ장은 저성장·양극화 탈출을 위한 기업 정책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제Ⅷ장은 결론 장으로서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실증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의 저성장 양극화 탈출을 위한 경제정책 대응과 정치경제체제적 대응방향을 제시한다.

II. 기업 경제론: 자본주의는 기업 경제다¹⁾

1. 주식회사제도의 출현과 자본주의 기업 경제의 등장

흔히들 자본주의의 핵심요소로 ‘시장경제 (Market Economy)’를 들곤 한다. 때로는 자본주의 경제를 시장경제로도 표현하면서 혼용해서 쓰기도 한다. 물론 현대 자본주의를 작동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계획 또는 명령에 의한 거래’가 아니라 ‘시장을 통한 거래’라는 점에서 시장경제는 자본주의 경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의 정수(精髓)로서 ‘시장경제’를 손꼽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시장을 매개로 한 거래는 자본주의 경제의 도래 훨씬 이전, 인류가 잉여생산물을 거래하기 시작할 때부터 존재해 왔다. 인류의 역사가 현대적 민주주의 체제에 이르기까지 경제활동 과정에서 통치 계급에 의한 수탈, 강제적 자원 배분 등이 빈번하였지만 시장을 통한 자발적 거래가 대중의 경제활동에 있어 대부분을 차지해왔다. 따라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존재해 왔던 ‘시장경제’는 비교적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용어라고 할 수는 없다. 본 연구는 현대 자본주의를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시장경제’가 아니라 ‘기업 경제’라고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 자본주의의 출발은 영국에서 1844년과 1862년에 법제화된 유한책임회사

1) 이 절의 논의는 좌승희의 전작(前作) (Jwa, 2017a; 좌승희, 2021a)에서 자유롭게 인용 전제하였다.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의 등장으로부터 비롯되며 유한책임회사 등장 이전과 이후의 기업의 역할은 근본적인 차이를 가진다. 사실 17세기 초 무역 독점권을 부여 받은 동인도회사의 주식이 거래되면서 근대 주식회사가 탄생하였지만 일련의 주식 투기 광풍과 그에 따른 피해로 인해 자유로운 주식회사의 설립이 금지(1720년 Bubble Act) 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1825년 버블법(Bubble Act)이 폐지되기까지 근 1세기 동안 유한책임회사는 근대 기업의 형태로 자리 잡지 못하였다가 1844년 Joint stock companies Act, 그리고 1862년 Companies Act의 제정을 통해 현대적 유한책임회사 제도가 정착되면서 ‘회사(company)’는 법적 생명력을 가진 용어가 되었다.

유한책임회사라는 새로운 사회적 창조물은 아담 스미스가 1776년 [국부론]에서 각각 분업의 이점과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 예로 들었던 압정 공장, 양조장, 정육점과 빵집과 같은 전(前)자본주의적(pre-capitalist) 기업들이나 농경사회의 제조업이라 할 수 있는 대장간 기업(blacksmith)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선 유한책임회사는 개인투자자가 감수하여야 할 리스크를 제한함과 동시에 주식 발행을 통해 자본의 규모를 거의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농경사회의 대장간기업과 같은 개인기업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무한대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유한책임회사는 자본, 노동, 기술을 복합적이며 체계적 방식으로 결합하여 대규모로 운용할 수 있으므로 현존하는 기술과 기회를 활용한 상업화에 능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기회를 발견하고 활용하는 —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 기반이기도 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생산 함수는 자본, 노동, 기술의 선형적인 합계로 표현되는 데 비해 실제 유한책임회사의 생산은 생산요소 간 비선형적(non-linear) 상호작용 및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즉 현대 유한책임회사에서의 생산방식은 ‘고차원적 복잡 시스템(higher order complex system)’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생산요소의 단순한 선형 함수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류 경제학 생산 이론은 현대 기업의 생산 활동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유한책임회사를 통한 대규모 생산 활동이 가능해지자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경제활동의 터전을 농지에서 자본주의 기업으로 옮김으로써 농업경제(agrarian economy)가 자본주의 경제로 도약할 있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인류는 단순 교환 경제를 영위하던 농경사회에서 기업이라는 시장과는 제도적 작동 원리가 다른 경제조직을 발명하여 산업혁명을 일으킴으로써 자본주의 경제로 창발하였다. 그럼 시장과 기업은 제도적으로 작동 원리가 어떻게 서로 다른가?

시장과 기업은 기능적으로는 둘 다 자원배분을 위한 장치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그 운영방식이 다르다. 시장 교환 경제는 합의에 기초하는 수평적 질서를 기반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반면, 기업은 수직적 위계, 명령 질서를 바탕으로 자원을 배분 한다. 그래서 시장은 현실거래에서 거래조건에 합의하기 위한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기업은 조직 내에서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결국 기업은 현실 시장이 정보 비용 때문에 생기는 높은 거래비용 때문에 상호 거래조건에 합의하기 어려운 자원 배분과 생산 문제를 조직 내에서 위계와 명령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업이라는 조직이 비선형적인 고차원의 창발적 시너지 원으로서, 기업이 부재하거나 부실했던 농경사회를 자본주의라는 보다 복잡한 기업 경제로 이끌 수 있었던 이유다.

2. 기업 경제의 역사 개관

그러나 1867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등장한 이후, 기업은 노동자가 창출한 잉여 가치를 착취하는 장치로서 경제불평등의 원천이라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사상이 범람하면서, 또한 좌파의 공격에 의해서 오도된, 대기업은 무조건 독점자 라는 단순히 기업의 규모가 큰 것이 독점의 증거라는 순진한 사상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지배하면서 기업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와 왜곡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역사는 분명히 시장교환경제만으로 경제발전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주류 경제학은 시장경제만이 경제발전을 견인한다고 하겠지만 이 주장은 그 많은 시장경제 실험 속에서도 기업이 번창한 경제만이 발전하였음을 보지 못하는 주장이다. 우리는 그 많은 시장경제 중에 성공한 시장경제라는 부분집합은 기업경제임을 살필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취약한 시장교환 경제를 넘어 기업 조직이 이끈 기업경제라 함이 더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다.

현대 주류경제학은 마치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발전의 원천인 것처럼 이론화하지만 이는 기업이라는 경제조직이 든든히 받치고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18세기 (주식회사)기업이라는 “사회적 기술”이 등장하여 과학기술을 경제적 재화로 대규모로 전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류역사상 최초로 제조공업을 바탕으로 제1차 산업혁명과 경제발전이 가능하였으며, 그 이후 이어진 모든 산업혁명들과 오늘날 일어나는 디지털 지식기반경제로의 혁명적 변화들도 모두 기업들이 신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을 이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아무리 좋은 첨단과학기술이 넘쳐도 이를 상품화할 능력 있는

기업이 없으면 경제에는 무용지물이다. 같은 맥락에서, 멸절한 기업을 없애고 농경사회로 역주행한 역사적 사실도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르크스의 교훈을 따라 불평등의 원천이라는 자본주의 기업들을 국유화하여 국영 공장화 하고 생산과 분배를 공산당이 주도했던 사회주의/공산주의는 반세기 뒤에 모두 제조공장이 몰락한 농경사회로 역주행하여 체제 자체가 해체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주식회사 기업을 앞세워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이끈 중국은 그 많은 전환 경제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도약에 성공하고 있다. 후진경제라는 말은 사실상 후진기업경제와 동의어라 해도 될 것이다. 기업 부문이 쇠락하는 선진국경제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것 또한 취약한 기업 경제 탓이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세계 경제 발전사 최고의 기업 경제 성공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럼 오늘날의 한국경제의 어려움은 어디서 올까? 본고는 바로 이 질문에 답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GDP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자리수 혹은 5% 미만으로 감소한 반면, GDP의 나머지 부분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다. 주목할 점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심지어 농업 활동도 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의 최고 고전이라 할 수 있는 국부론에서 대기업에 대해서는 적대적 감정을 나타냈으며 소규모 개인기업 또는 가족기업을 매우 선호하였다. 당시의 대기업은 식민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독점기업 — 가령 영국 동인도 회사(British East India Company) — 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리라 짐작되고도 남는다. 아담 스미스의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에 유래한 것으로 보이며 다분히 식민시대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지만, 이미 베네치아 등의 도시국가에서 활성화 되었던 주식회사제도의 장점을 보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대 경영학의 권위자인 Chandler(1977)는 “기업은 성장과 발전의 기관차 또는 엔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Simon(1991) 또한 자본주의경제는 시장경제(market economy)라기보다 ‘기업에 의한’ 조직경제(organizational economy)에 더 흡사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주류 경제학계의 대다수는 아직도 이 같은 주장들에 대해 주의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 자본주의 경제는 어떤 방식으로 가장 정확하게 묘사될 수 있을까?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민간회사(private corporation)가 시장과 정부에 필적하는 또는 더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자본주의 경제를 ‘시장경제

(market economy)’를 대체하여 ‘기업 경제(corporate economy)’라고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은 사실 Chandler 나 Simon 의 견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수준의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기업은 ‘법적으로 다수의 유한책임 주주는 물론 무한 책임 주주들을 포함한 복수의 주주들에 의해 공동 소유된 조직으로서 팀 생산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술(social technology)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된 기업은 Coase(1937)의 “기업의 시장 대체” 이론을 넘어 ‘시장 창출과 확대자(market creator and expand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을 견인한다.

주류 이론은 Coase의 시장과 기업 간의 한계 대체(substitution at the margin)가설에 따라 기업은 시장의 거래비용이 높아질수록 거래비용이 높은 거래를 대체(내부화)하는 장치라고 주장한다. 마치 기업이 시장거래 영역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Jwa(2017a)와 좌승희(2021a)는 기업은 원래 거래비용이 높아 시장거래 대상에서 열외 되는 경제활동을 개척하여 새롭게 시장 경제에 편입시킴으로써 시장의 영역을 확대하는 장치라고 해석한다.

Ⅲ. 기업 경제의 생산과 분배 문제: 경제 분석의 무대 뒤로 사라진 기업조직

1. 기업 없는 생산 이론

그러나 아직도 경제학은 기업에 대한 편견을 못 바꾸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과 분배 문제를 논함에 있어 기업과 근로자는 좌파 경제학처럼 서로 대립적 관계에서 보든 아니면 협력적 관계에서 보든 가장 중요한 주체이다. 그러나 성장이론이나 분배 이론은 기업은 배경 일뿐 직접적인 분석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로자에 대응되는 주체는 실제로 기업이라는 조직 임에도 불구하고 좌파 경제학은 자본(가) 대 근로자(노동자)라 하고 주류경제학은 생산자 대 근로자라는 시각으로 본다.

주류경제학의 생산 이론은, 물리학의 분석 원리인 모든 물체는 그 최소한의 구성단위로 분해되며 그러한 구성 단위의 특성에 대한 분석(分析)을 통해 물체의 전체적 특성을 규명할 수 있다는 환원주의를 원용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은 단순화하면 생산에 투입되는 그래서 생산물의 가치의 기본적 구성 단위가 되는 생산요소로 나누어 분석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기업은 생산의 기술적 구성요소인 소위 자본, 노동, 기술 등의 생산요소(production factor)와 생산물 간의 수리적 생산함수(production

function)라는 개념으로 대체되었다.

신고전과 생산 함수는 $Y = Af(K, L)$ [식 (1)]로 정의되는데, 여기서 Y 는 생산물, K 는 자본 투입량, L 은 노동 투입량, 그리고 A 는 기술 수준 등 자본과 노동이라는 기본 생산요소를 제외한 종합적인 생산효율성을 측정하는 효율성 파라 메타로서 통상 총 요소 생산성이라 불린다. L 은 필요에 따라 인간에 체화된 지식 자본을 포함하는 인적 자본으로 정의되기도 하지만 편의상 지식 자본은 A 의 일부로 가정된다.

이 모형에서는 기업조직의 본질적 기능인, 요소에 대한 보상을 결정하는 분배(distribution) 문제를 포함하여 생산을 위한 모든 자원 동원과 배분(allocation) 과정은 생산함수라는 기술적 관계로 대체되고 기업 조직은 배경으로 사라졌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이 없는 생산함수를 자조적(自嘲的)으로 블랙 박스(black box)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다.

이 접근법의 문제는 생산요소의 측정 문제를 비롯하여 A 라는 총 요소생산성 개념을 현실적으로 추정하는 데 결정적인 취약성이 있다는 점이다. A 는 이론상은 정의가 되지만 실제로 측정하기가 어려워 결과적으로는 생산이 자본(K)과 노동(L)에 의해 설명되지 못하고 남는 부분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생산 함수의 추정 오차를 생산성이라 부르는 형국이다. 결국은 생산 함수의 추정 오차가 클수록, 즉 자본과 노동 생산성이 과소 추정될수록 총 요소생산성은 커지는 모순을 안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의 무지(measure of our ignorance)가 오히려 경제의 효율을 높이는 꼴이라고 자조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아래 실증 분석에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오늘날 발달된 기업회계원리와 기업자산가치 측정 기법의 발달을 반영한 기업대차대조표상의 자산 항목이 자본은 물론 지적 자산 전체의 대용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생산 함수와 분배 함수를 경제 내의 기업 총자산의 함수로 정의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2. 재분배 복지제도와 생산과 분배의 분리 가능성

이렇게 단순화된 주류 신고전과 생산 함수는 분배 이론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신고전과 경제학의 한계 주의 분배 이론은 “생산요소의 분배 몫은 각 요소의 한계생산성에 생산물 가격을 곱한 한계생산물에 수렴한다. 그리고 이들 생산요소에 대한 사회적 분배 몫은 각각의 한계생산물에 전체 요소 공급량을 곱한 값에 수렴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현대 재분배 복지국가 이념은 이러한 분배 이론에 기초하여 생산이 끝난 이후의 분배나 재분배는 생산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논리적으로 정부의 개입 없는 시장에서 생산이 완료된 후의 분배나 재분배는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인 효율적 생산 후에,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비판가들이 주장하듯 불평등을 초래하는 시장 분배 결과를 재분배를 통해 교정하면 이상적인 복지국가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수정자본주의의 근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에는 두 가지의 오류가 있어 보인다. 첫째는 마치 생산과 분배가 분리 취급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주고 있으며, 둘째는 생산이 단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어서와 같이 되풀이 이어질 경우 재분배가 차기의 생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생산과 분배의 관계는 현실 기업활동을 제대로 관찰한다면 쉽게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업의 생산활동이란 생산계획을 짜고 이를 위한 생산요소에 대한 보상을 결정하는 등 필요 자원 동원 계획을 짜고 동시에 제품의 판매 계획까지 포함하는 총체적인 활동을 포괄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생산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자원에 대한 보상 체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생산의 사전 계획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은 분배를 전제로 하는 활동이다. 생산 후에 분배한다는 개념은 분배라는 보상의 인센티브 기능을 무시한 가정이다. 편의상 월급이나 시급이라 해서 생산 기간 후에 지급한다고 하지만, 이는 이미 고용 계약 시 사전에 정해져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다른 모든 자원의 활용에 있어서도 사전에 보상 혹은 대가를 결정한 후 사용 계약을 해야 함은 상식이다.

생산을 결정하려면 사전에 분배를 약속해야 하고, 분배 결정이 바뀌면 생산도 바뀌는 상호의존성 때문에 생산·분배의 분리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기업의 생산과 분배의 동시 결정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모형화함으로써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재분배의 분리 가능성 문제는 생산 분배가 단발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는 지속적 생산의 경우, 시장 외적인 힘에 의한 생산 이후의 재분배라도 그 다음 기의 보상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의 경우는 정부의 재분배 재원 공급자로서 조세 부담의 변동에 따른 대응이 필요할 것이고, 요소 공급자의 경우는 재분배에 따른 개인 소득 수준의 변동에 따라 생산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가 다양하게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재분배는 차기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임금 협상은 장단기 실질 소득

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모두 감안하여 이루어 질 것이기 때문에 재분배정책도 이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분배 복지국가의 정치적 필요성 때문인지 논의가 충분치 않은데 특이하게도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사회주의체제를 구상했던 Schumpeter (1950)가 흥미로운 관찰과 제안을 하였다. 그는 기업의 힘으로 번영하는 자본주의가 노조의 과도한 분배 요구와 지식인 사회의 반 대기업 정서, 기업이 정신의 쇠퇴 등으로 사회주의로 이행하게 될 것으로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주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우선 그는 자본주의의 생산 과정은 분배와 생산 활동을 분리할 수 없는 통합적 과정이라고 보고 성공적인 사회주의가 되려면 이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사회주의 중앙 계획당국이 생산과 분배를 분리하여 노조의 과도한 분배 요구를 차단하고 생산활동은 자본주의 대기업의 생산관리 경험자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생산-운송과 마케팅에 부수되는 모든 작업을 포함하는 기술적 조건들에 의해서 부과되는 여러 제약 아래에서 현존 “생산요소들”을 합리적으로 결합하는 것에 불과하다. 상업사회에서 생산요소들을 결합하는 일에는 그러한 요소들의 구입이나 임대도 포함된다. 그래서 상업 사회의 전형적인 개인소득은 바로 이러한 구입이나 임대 과정에서 발생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 생산물의 생산과 “분배”는 상호 영향을 미치는 동일한 과정의 하나의 다른 국면일 뿐이다. 그런데 상업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 사이의 가장 중요한 논리적-또는 순수 이론적-차이는 후자에서는 이러한 것이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 사회주의에서는 생산수단의 시장가치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들의 시장가치가 존재할지라도 사회주의 사회의 원리는 그것들을 분배 기준으로 채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는 상업사회에서 보는 분배 상의 자동성을 결여하게 된다. 그 공백은 정치적 행동, 예컨대 공동체의 규약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분배는 별개의 과정이 되고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생산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다.”²⁾

이 모형은 아직 성공 사례가 없지만 최근 30여년간의 중국식 기업주도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아마도 그 예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필자의 생각에는 그가 그린 사회주의는 소련 등 그 당시 공산국가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중국이 시험하고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유사한 기업주도 사회주의경제 모형이라 할 수 있으며 아마 중국이

2) 변상진 (2011), pp. 327-328 참조.

슘페터 사회주의의 성공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그는 분배와 생산을 분리함으로써 사회주의가 노조의 과도한 분배 요구를 차단할 수 있어 자본주의의 약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셈이지만, 동시에 분배가 생산과 분리되고 보상이 획일화되면서 일할 인센티브의 결여로 체제가 몰락한 소련 체제의 미래는 예견하지 못한 듯하다. 자본주의의 과도한 노조의 분배 요구 가능성 문제는 바로 봤지만 분배의 생산 인센티브기능이 자본주의의 본질 임은 가볍게 본 듯하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대의 신 기업 이론을 주도한 Alchian and Demsetz (1977)의 주장이 흥미롭다. 이들은 기업은 시장과 같은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하며 반복되는 생산과정에서 생산요소의 생산성 감독과 측정, 그에 따른 보상의 차별(metering)을 통해 생산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분배가 생산에 우선한다고 관찰하였다. 이러한 인센티브로서의 분배와 생산 간의 관계가 무너지면 자본주의사회에서도 태업이 일어난다고 내다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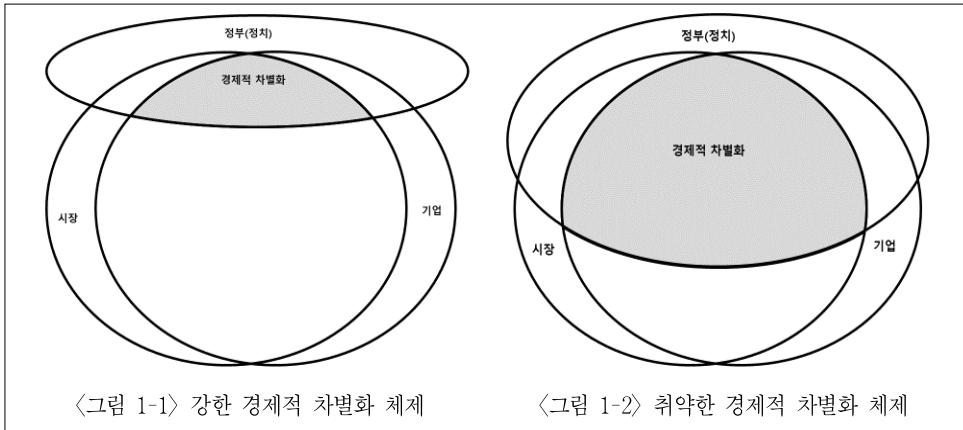
우리는 이하에서 기업을 현실에 있는 그대로 자본주의 기업 경제의 주축돌로 소환하여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과 분배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IV. 자본주의 기업경제발전이론 요약

1. 경제적 차별화에 입각한 시장, 기업, 정부의 삼위일체 경제 발전론

본고는 그 이론적 바탕을 Jwa (2017a)의 경제발전의 일반 이론에 두고 있다. 이 원리는 삼위일체 경제발전이론으로 정리할 수 있다. 경제발전은 시장만으로도 안 되고, 정부만으로도 안 되며 더구나 현대식 주식회사 기업조직이 없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림 2>와 같이 시장, 기업, 정부가 3위 일체가 되어, 시장의 본질적 기능인 “신상필벌의 경제적 차별화”를 실천할 때라야 가능해진다. 역으로 이 3자 중 어느 하나라도 경제적 차별화의 대열에서 이탈할 경우 경제발전 과정의 자체적 내부 모순 때문에 경제발전은 도로(徒勞)에 그치게 된다. 한편 이 들 3자가 보다 더 경제적 차별화 원리의 실천에 공조하게 되면 경제발전의 기회는 그만큼 높아진다. <그림 1>에서 흑색 공조 영역이 큰 경우(<그림 1-1>)가 약한 경우(<그림 1-2>)보다 더 발전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삼위일체 경제적 차별화 발전 이론의 개념도



출처: Jwa (2017a).

그 동안 경제발전은 시장주도여야 한다거나 정부주도여야 한다는 흑백 논쟁이나 기업의 경제발전 역할에 대한 무시는 잘못된 것이다. 정부나 정치의 기능을 마치 시장이나 기업의 차별화 기능을 교정하여 보다 평등한 경제적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균형발전 이념이나 사민주의 체제나 수정자본주의 체제도 발전 역행적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경제발전은 시장, 정부, 기업이 모두 경제적 차별화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만 그 교집합으로서 가능해지는 대단히 혼치 않은 어려운 과정이다. 이하에서는 간략하게 삼위일체 경제발전이론을 정리하고자 한다.

2. 삼위일체 경제발전이론의 주요 명제와 시사점 요약

〈주요 명제〉

경제발전은 차원(order)을 달리하는 경제의 비선형적 창발(emergence) 과정이다. 마차경제에서 기차, 자동차, 비행기, 우주선 경제로, 혹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지식정보사회로 차원을 달리하여 도약하는 과정이다. 마차에서 우주선으로, 혹은 농경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의 발전은 단순히 마차를 보다 많이 생산하는 마차 경제나 혹은 농경사회의 선형적(order-fixed linear) 성장과 다르다.

② 경제적 성과에 따라 보상을 차별하는 “경제적 차별화”는 모든 경제주체들을 성과 경쟁에 참여하도록 동기 부여하는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다. 역으로 경제적 성과를 무시하거나 혹은 성과를 역 차별하는 경제 평등주의는 경제 정체의 충분조건이다. 경

제 평등주의는 경제전체의 사보 타지를 초래한다.

③ 경제적 차별화는 동기 부여를 통해 경제발전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enabling institution)로서, 마차경제의 선형적 경제성장이 가져오는 규모의 비 경제, 즉 경제성장의 장기하락가능성(열역학 제2법칙에 따른 엔트로피의 증가현상)을 극복하여 우주선경제로의 창발적 경제도약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동기부여장치이다.

④ 시장과 기업은 태생적으로 경제적 차별화를 위해 생겨난 제도적 장치이다. 시장은 성과 있는 개인과 기업에게만 차별적으로 성공을 허용하며 기업은 생산성 혹은 효율성이 높은 개인이나 자본, 협력기업만을 우대한다. 따라서 정부 또한 시장과 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차별화 제도를 공급해야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그림 1-1>). 정부가 시장과 기업과는 반대로 성과를 무시하는 제도와 정책을 택하면 경제발전은 실패한다(<그림 1-2>). 결국 시장, 기업, 정부가 3위일체가 되어 경제적 차별화 제도를 정착시키는 경제만이 발전할 수 있다.

⑤ 흥하는 이웃의 성공노하우에 대한 무임승차는 경제발전의 원초적 씨앗이지만 경제적 차별화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경제발전과정을 약화시킨다. 정부의 경제발전 역할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책과 법제도 등을 통해 사유재산권제도를 강화하여 무임승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무임승차의 대상이 되는 흥하는 이웃을 우대하여 키워내는 경제적 차별화를 제도화, 정책화 해야 한다. 지금처럼 정부가 특허권이나 저작권이나 혹은 사업 권 등을 허용하여 무임승차 당하는 흥하는 이웃들에게 사안에 따라 일시적인 혹은 장기적인 독점권을 허용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기업육성, 산업정책 등을 통해 흥하는 이웃에 대한 차별적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더 많은 성공이웃을 키워내는 것이 필요하다.

⑥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흥하는 사회가 가능하다. 시장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듯이 정부도 흥하는 이웃을 도와야 더 많은 흥하는 이웃을 키워낼 수 있다. 경제발전은 모두가 흥하는 이웃으로 태어나는 과정이다. 이에 역행하는 사회는 발전에 실패한다.

〈주요 정책 시사점〉

① 경제발전은 신고전과 주류 경제학 처방처럼, 생산요소가 공급되면 시장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경제발전은 시장, 기업, 정부가 같이 경제적 차별화 원리를 실천해야만 가능해지는, 낙타의 바늘구멍 통과만큼이나 어려운 희귀한 현상이다.

② 정부의 산업정책적 노력은 경제발전의 필수적 요인이다. 그러나 자원을 많이 투

입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경제적 차별화 인센티브 제도를 내재한 산업과 기업육성정책만이 성공 가능성이 있다.

③ 정치의 경제에 대한 기여는 경제적 차별화 인센티브제도를 사회에 공급하는데 있다. 이에 역행하는 경제평등주의 제도를 공급하는 정치는 국가 경제를 정체의 길로 인도한다.

④ 정치제도가 어떠하던, 전제군주제든, 민주주의든, 권위주의든, 그 형식의 차이에 관계 없이 정치제도가 경제적 차별화 인센티브제도를 지지 공급할 경우에만 경제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 경제적 차별화 원리를 수용하는 정치나 정부는 청렴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적 차별화는 반 부패, 청렴, 투명, 효율과 동의어나 다름없다.

2. 새로운 정치경제학 이론

이상의 경제발전의 일반 이론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국가가 해야 할 경제발전을 위한 제도 공급 기능을 다루고 있는 셈이다. 일종의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치경제학 이론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그 동안 칼 마르크스 류의 당위적 정치경제학(normative political economy)은 일반적으로 약간씩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경제 평등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지향한다. 그러나 일반 이론에 기초한 새로운 정치경제학 이론은 4가지 정치경제 체제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이는 <표 1>에 보인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라는 두 가지의 대안적 정치 질서와 동시에 경제 차별화 체제와 경제 평등주의 체제라는 두 가지의 경제 질서가 상호 결합되어 4가지의 정치경제 체제가 만들어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현실 정치경제 체제는, 첫째, 자유민주주의와 차별화 경제 질서가 결합되어 “차별화(시장) 민주주의”, 둘째,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평등주의가 결합하여 “평등 민주주의(사회민주주의, 수정자본주의, 혼합 경제 등)”, 셋째, 비민주적 권위주의 정치와 차별화 경제 질서가 결합하여 “차별화(시장) 권위주의”, 넷째로, 비민주적 권위주의와 경제 평등주의가 결합하여 “평등(공산/사회) 주의 독재체제” 등, 4가지의 정치경제 체제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분류는 Acemoglu and Robinson (2012)의 포용적 정치·경제 체제와 착취적 정치·경제 체제라는 이분법적 체제 분류에 비해 훨씬 다양한 체제를 허용하여 현실성을 크게 높였다 할 수 있다. 경제발전의 일반 이론에 기초한 새로운 정치경제학 모델은 정부 대 시장, 혹은 민주 대 반민주, 혹은 포용 대 착

취, 혹은 공산·사회주의 대 자본주의 등 단선적 이분법적 분류를 거부하며 이는 어느 한 체제도 절대적 선(善)이나 신(神)일 수 없다는 인간사회의 보편적 상식에 부합된다.

〈표 1〉 경제발전의 실증적 정치경제학(positive political economy) 모형

정치질서 경제질서	자유민주주의	권위주의/비 민주주의
	차별화(시장) 민주주의	차별화(시장) 권위주의
경제평등주의 질서	평등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수정자본주의/혼합 경제 등)	평등권위주의 (공산·사회주의/전체주의)

이 분류에 의하면 차별화 민주주의나 차별화 권위주의는 정치 질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경제발전에 친화적 일 수 있고 평등민주주의는 민주주의체제임에도 경제 정체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평등권위주의 체제는 정치 질서의 전체주의성과 동시에 경제 또한 정체를 못 면할 위험이 있다. 평등민주주의는 오늘날 장기적 경제 정체와 양극화를 못 면하고 있는 서구 선진국의 성숙민주주의가 해당 될 수 있고, 평등권위주의 체제는 이미 해체된 공산권 국가들이 해당될 것이다. 차별화 권위주의는 한국의 개발연대, 대만과 싱가포르의 도약 과정, 중국의 지난 30여년간의 도약 과정, 일본을 포함한 현 선진국들의 산업혁명과정이 해당된다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한국도 출발은 차별화 권위주의였으나 선진국 대열에 이르면서 평등민주주의로 바뀌어 경제 저성장과 양극화의 길로 가고 있다. 오늘날 순수한 의미의 차별화 시장민주주의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전세계가 저성장 양극화를 조장하는 평등민주주의에 빠져 있고 후진국의 일부는 평등권위주의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세계경제와 미국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이런 일반적 유형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Jwa, 2024; Jwa and Lee, 2025).

V. 기업 경제의 거시경제 모델: 성장·분배 결정 모형

1. 일반 이론이 시사하는 거시 생산·분배 함수 모형

일반 이론은 생산과 분배가 기업의 함수임을 시사한다. 기존의 생산 함수에 익숙해진 독자들을 위해 신고전과 생산 함수인 $Y = A \cdot f(K, L)$ 〔식 (1)〕에서 새로운 함수 모

형을 유도하고자 한다. 우선 생산 함수에 대한 통상적인 단순화 가정인 $f(\cdot)$ 함수가 일차동차함수(linear homogeneity)라는 가정을 빌려오면, 식 (1)은 $Y/L = A \cdot f(K/L)$ 로 변형될 수 있다. 여기서 기업의 대차대조표 자산 항목은 실물 자본을 포함하는 유형자산(tangible assets)과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는 지식 자본 등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 등,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적, 지적 자본의 가치를 시장가치로 환산한 값으로 **노동을 제외한** 모든 생산요소의 총합이다. 기술이나 노동이 창출하는 무형자산 등 소위 생산 함수의 효율성지표에 해당하는 무형 재산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한은 적절한 가치로 환산되어 자산 항목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총자산 항목은 생산 함수의 K 와 A 를 전일적(全一的)으로(holistically) 통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말하자면 기업의 총자산은 노동을 제외 한 경제 내의 모든 유형, 무형의 경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의 총합(이를 CA 라 명명한다)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생산 함수, 식 (1)은 $Y/L = g(CA/L)$ [식 (2)]로 변형될 수 있다. $g(\cdot)$ 함수는 기업을 전일적(全一的)으로 보는 반면, $f(\cdot)$ 함수는 기업을 분해한 함수로서 그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일인당 총생산은 경제 내의 모든 기업조직들이 보유한 근로자 일인당 총 기업자산의 함수라는 의미이다. 이를 실제 추정할 수 있는 식으로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bullet \text{ 생산함수: } Y/L = \alpha + \beta \cdot (CA/L) + \gamma \cdot X + \epsilon \quad \textcircled{1}$$

여기서 α , β , 그리고 γ 는 추정할 계수이고, CA 는 기업 총자산, X 는 기업자산 이외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의 정책과 제도 변수이다. ϵ 는 측정 오차이다.

그리고 이 생산에 대한 의사결정이 분배와 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앞의 주장을 감안하면 분배 또한 생산과 동일한 변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분배 결정이 생산과 다른 특수한 측면이 있다면 그런 측면은 X 변수를 다양하게 해석하여 반영하면 될 것이다. 분배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bullet \text{ 분배함수: } Gini = a + b \cdot (CA/L) + c \cdot X + \epsilon \quad \textcircled{2}$$

그리고 최근 관련 연구자들이 생산과 분배 간의 직접적인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계량 분석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를 위한 모형으로 편의상 분배 함수를 총생산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변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bullet \text{ 변용된 분배함수: } Gini = a + b \cdot (Y/L) + c \cdot X + \epsilon \quad (3)$$

그러나 이는 ①식이나 ②식처럼 논리적 인과 관계식 이라기 보다는 내생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하는 식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Gini$ 와 Y/L 이 모두 내생변수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변수, CA 의 내생성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데 CA 는 독립적인 경제적 의사결정 주체로서 시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충격을 주체적으로 내부화하는 기업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의 산물로서 외생성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 모형이 갖는 상식적이고도 설득력 있는 경제적 논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생산 함수의 중심이 되는 총생산과 총기업자산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bullet (Y/L) = \beta \cdot (CA/L).$$

이식은 좌변의 플로우(flow)인 (Y/L) 를 우변의 스톡(stock)인 (CA/L) 으로 설명하는 식이다. 이는 국민총생산 플로우는 경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국민경제의 총자산 스톡에서 발생하는 수익률 β 만큼씩의 영속적인 연금형태로 창출되는 연간 수익의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β 는 그 경제 전체 기업의 종합적인 한계생산성으로 해석된다. 이런 면을 포함한 이 모형의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는 Jwa(2017a)를 참조하기 바란다.

다음으로 X 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 변수로서 국가의 정치경제 체제의 특징을 대표하는 재분배복지제도 변수가 필요한데 실제 분석에서 적절한 측정 변수가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 정부의 복지지출 자료를 쓸 수 있지만 국가마다 표준과 가용 기간이 다르고 그 복지 재정의 효과나 운영의 효율성도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실제 관찰되는 시장 소득 Gini 계수의 가처분소득 Gini 계수에 대한 비율(Gini-ratio)을 대용 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이 변수는 실제 가처분소득의 불평등 도를 낮추고자 하는 재분배 복지 정책의 효과를 직접 측정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정부의 시장 소득 Gini 변동에 대응한 분배 개선 복지 지출 결행 시차를 감안하여 일년 시차 변수인 Gini-ratio(-1)를 활용한다. 오늘날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의 복지지출이 일종의 경직성 지출화 되어있어 정책대응 시차가 더 늦을 수도 있으나 모든 나라 민주주의가 점점 더 인기영합적으로 적응

하면서 매년 예산 사이클 마다 복지지출이 증가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최근의 한국정부처럼) 일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은 분석결과의 유의성에 따라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변수와 실제 복지재정 지출과의 상관관계는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정치경제 체제 전환과 경제구조 변화 효과 추정방법

이상의 분석 모형 체계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본고의 목적인 한 경제의 정치경제 체제 변화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그림 2>와 같은 개념의 모형으로 변용 해서 활용할 수 있다. 만일 목적이 정치경제 체제 (A)에서 체제 (B)로 이행한 경우라면 이 변화 효과는 <그림 2>와 같이 분리 추정할 수 있다. 체제 변화의 효과만 보려 한다면, (A)에서 변화된 (B) 만을 추정하면 되지만, 나아가 체제 변화 이후의 전체 경제 구조 현황을 파악하려면 [(A)+(B)]를 추정해야 한다.

<그림 2> 정치경제체제 변화 효과 추정 개념

	정치경제체제(B)
정치경제체제(A)	경제의 기본 바탕(A)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식을 추정해야 한다.

$$\bullet \quad Y/L = \alpha + \beta_1 \cdot (CA/L) + \beta_2 \cdot D(CA/L) + \gamma_1 \cdot X + \gamma_2 \cdot DX + \epsilon \quad \text{①-1}$$

$$\bullet \quad Gini = a + b_1 \cdot (CA/L) + b_2 \cdot D(CA/L) + c_1 \cdot X + c_2 \cdot DX + \epsilon \quad \text{②-1}$$

$$\bullet \quad Gini = a + b_1 \cdot (Y/L) + b_2 \cdot D(Y/L) + c_1 \cdot X + c_2 \cdot DX + \epsilon \quad \text{③-1}$$

여기서 D 는 체제 변화 이후 기간을 1로 하는 더미변수이다. 이 경우 더미 변수가 곱해진 변수의 추정 계수인, β_2 , γ_2 , b_2 , c_2 의 유의성 여부로 구조개혁의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개혁 이후의 구조를 파악하려면 $(\beta_1 + \beta_2)$, $(\gamma_1 + \gamma_2)$, $(b_1 + b_2)$, $(c_1 + c_2)$ 의 부호와 유의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³⁾

3) 이 방법에 대해서는 Maddala(197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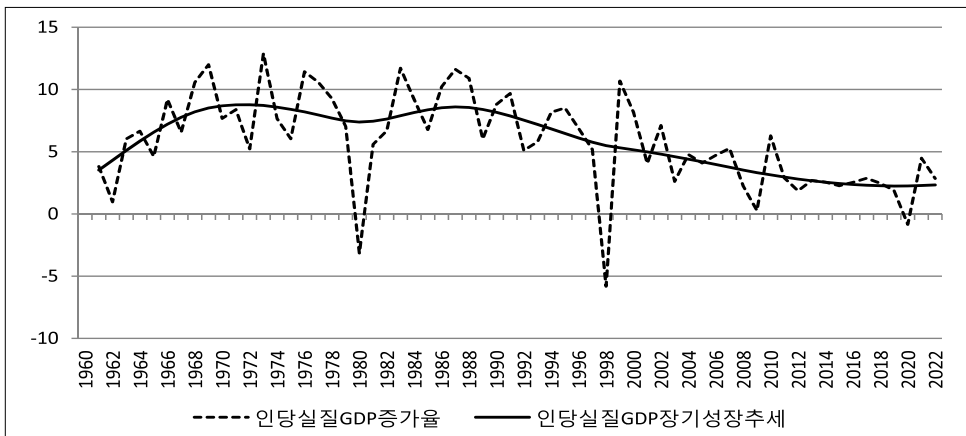
이 방법은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개혁 효과 추정 방법인 구조식의 상수항(constant term)인 “ α ”나 “ a ”가 개혁의 전후에 변화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소위 이중차분방식(Difference in Difference)과 달리, 이 모형은 설명변수 계수의 변화, 즉 경제구조식의 파라 메타, β , γ , b , c 자체의 변화 여부를 검증하는 것으로, 보다 본질적인 경제주체들의 행태 변화와 그에 따로 구조 자체의 변화 여부를 추적하는 것이다.

VI. 한국의 정치경제 체제와 성장·분배 효과

1. 한국의 성장과 분배 역사 개관

한국경제에 대한 분석은 세계와 미국 경제에 대한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 모형의 틀과 변수를 선택 하였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나름 다른 역사적 변천을 겪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 그 동안 저자 좌승희(2006; 좌승희·김창근, 2010; Jwa, 2017b, 2020, 2023)는 오랫동안 현대 한국경제발전의 역사에 대해 연구와 발표를 해 왔기에 여기서 이를 재론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간략하게 여기서의 실증 분석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독자들의 실증분석 모형과 결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성장과 분배의 역사를 개관하고자 한다.

〈그림 3〉 한국의 일인당 실질소득의 장기성장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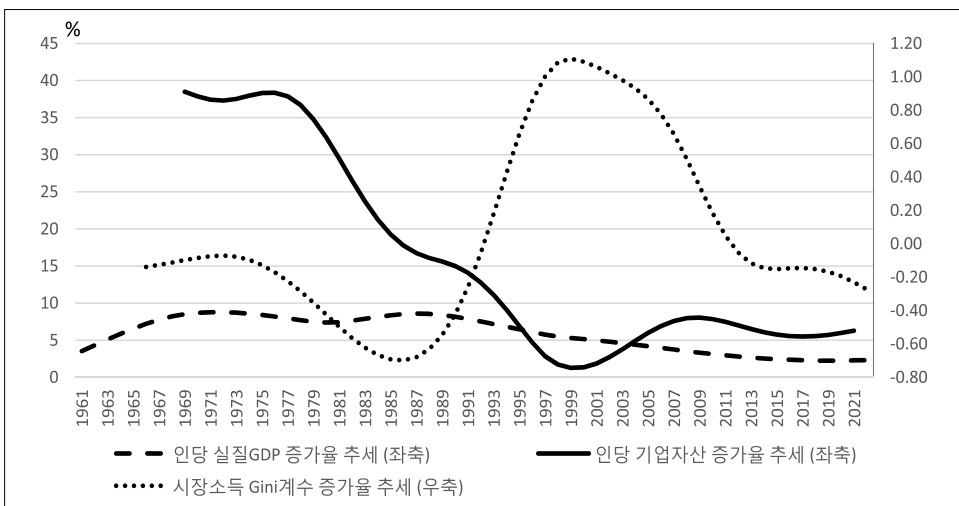
우선 〈그림 3〉은 60년대 이후의 일인당실질소득 증가율 추세를 보여준다, 이에 의

하면, 한국경제는 1960년대 이후 30여년간 연평균 약 8~9% 수준을 넘나드는 눈부신 경제성장의 도약을 이룬 후, 1980년대말에서부터 지속적인 장기 성장 추세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한국경제는 한번도 지속성 있는 추세 반전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속에서 최근에는 세계은행 등이 공식적으로 한국경제를 선진국이라 호칭하면서 저성장 역사가 잊혀지고 있다.

1987년 정치민주화가 이루어진 이래 당시 80년대중 정점을 보였던 일인당 소득 증가율 8.6%가 2020년에 2.2%로 하락하여 지난 33년간 약 10년에 1.9%씩 하락해 왔다.

동시에 <그림 4>는 일인당 실질소득과 시장 소득 불평등 지수 그리고 한국의 기업 부문의 성장 지수(일인당 실질 기업자산 증가율) 추세를 같이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의하면, 70년대 이후 지속 하락하던 소득불평등지수(시장 소득 Gini 계수; Gini coefficient)가 1986년을 최저점으로 하여 87년부터 하락폭이 급속도로 낮아지다 1993년부터는 급속히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그 이후 불평등지수가 2011년까지 지속 악화되었다. 그러나 2012년 이후에는 소득불평등지수의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미미하나마 분배가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특히 지난 문재인정부의 5년여동안 도 미미하지만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물론 지난 정부에서 분배 통계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가능한 이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였음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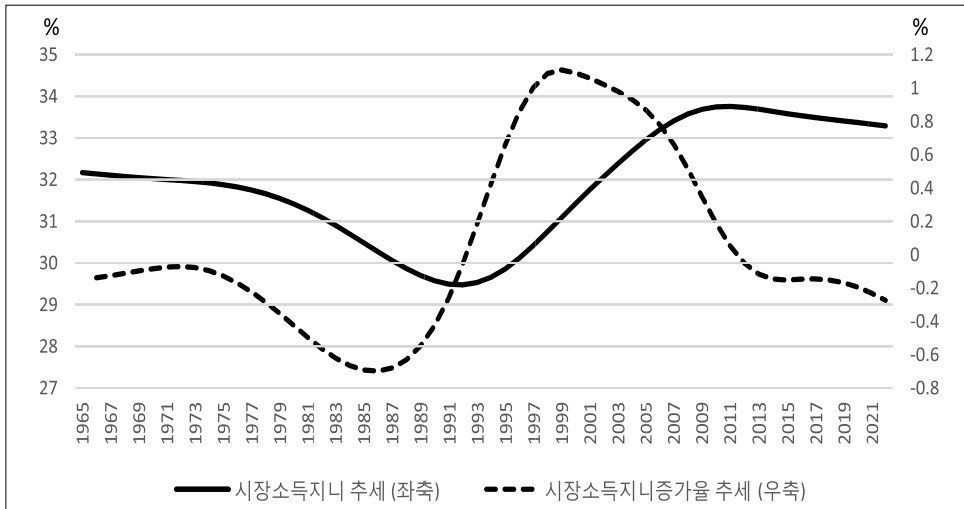
〈그림 4〉 한국의 일인당 실질 GDP 와 일인당 명목 CA, 시장 Gini 증가율 추세(%)



주: 1) 추세 선은 Hodrick-Prescott filter 사용. 2) 상관관계: CA와 GDP는 0.650, CA와 시장 Gini는 -0.654, 그리고 GDP와 시장 Gini는 -0.372.

여기서 흥미로운 현상은 소득증가율이 내려가기 시작한 1980년대말과 90년대초 사이에 소득분배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림 5>는 소득불평등 지수와 그 증가율 추세를 같이 보여준다. 이에 의하면 개발연대 동안 개선되던 소득 분배가 80년대말과 90년대초, 즉 정치민주화가 이루어진 시기부터 악화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한국의 시장 소득 Gini와 증가율 추세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연구관심은 성장정체, 분배 악화, 정치 민주화 간에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최근까지 지속되는 성장 정체 속에서 2010년대 이후 미미하게나마 관찰되는 분배 개선 조짐은 왜 그렇고, 또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도 향후 한국경제의 미래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도대체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인가?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그림 4>에서 보인 일인당 한국기업 전체의 기업자산의 증가율 추세에 주목하기 바란다. 본고는 기업 경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 성장이 소득과 분배의 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주장을 해왔으며, 세계경제와 미국 경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를 어느 정도 확인하였기에, 한국경제의 경우 기업자산 증가율과 소득 증가율, 그리고 시장 Gini 계수 증가율 간의 상관계수가 각각 0.650 과 -0.654이고, 소득증가율과 시장 Gini 증가율 간에는 -0.372이라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우리는 아래에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이들 3개 변수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나머지 연구 관심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하고자 한다.

2. 주요 자료 설명

〈한국의 CA 자료 조성〉

본 연구에 사용된 기업자산 데이터는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기업 경영분석”(한국은행, 1968-2015)에 보고된 1968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 제조업·광업·전기업·건설업·도 소매업·숙박업·운수업 등 7개 산업 분야별 기업자산 조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조성하였다. 이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특정 기간별로 기업자산 조사 방법이 상이했던 관계로 데이터 시 계열 단층(불연속성)이 목격된 바, 이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연속적인(continuous)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기업 경영분석”을 보면, 1962년부터 1977년까지는 각 산업 분야별 기업자산 자료를 단순유의추출조사 방법에 의해 수집하였고, 1978년부터 2005년까지는 총화 임의추출조사에 의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전국 조사, 그리고 2009년부터는 국세청의 전수조사에 의해 자료가 수집되었기 때문에 이들 자료들 간에는 연속성이 없다. 그런데 다행히 1968년부터 모든 자료가 각 산업 분야별 총자산 증가율 데이터를 같이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전수조사를 했던 2009년 자료로부터 각 분야별 총자산 증가율로 소급 역산(逆算)하여 1968년까지의 연속적인 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었다.

〈한국의 Gini 자료 조성〉

한국은 1990년부터 도시 2인 이상 가구 소득 Gini 계수를 발표해 왔으나, 이 자료의 조사대상이 도시 2인 이상 가구에 불과하여 한국의 소득 Gini로서의 대표성이 약하여 2003년에는 2인 이상 비농가 소득 Gini 계수를 조사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2006년부터 2016년간은 전체 기구를 대상으로 소득 Gini 계수를 조사 발표하였다. 이상의 조사는 모두 분기 조사였으며 모두 통계청에 의해 조사되었다. 2011년에는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공동 조사로 표본 수를 10,000 가구로 대폭 확충한 Gini 계수가 발표되었다. 이에 통계청은 2017-18년 중에 연간 Gini 계수를 조사 발표하였고, 이어 2019년부터는 7,200 가구로 확대한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기별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통계청에서는 소득 Gini 계수를 지속적으로 수정, 확충해 오면서 발표하여 왔으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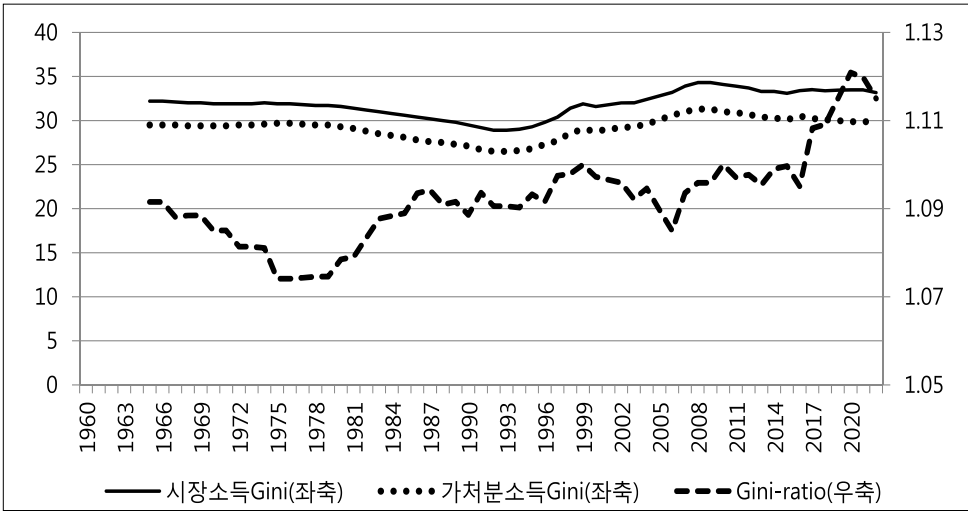
시 계열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있는 장기 시 계열 자료가 필요한데 마침 SWIID (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 (Solt, 2016) 의 한국 Gini 계수 자료를 구해 연구를 시작했는데 2021년에 이 자료가 수정되면서 신 자료의 신뢰성이 여러 면에서 의심스럽다는 판단 하에(아래 <참고자료 2>를 참조) SWIID Gini의 구 자료(2016)를 한국이 최근부터 발표하고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 Gini (2011-22)를 이용하여 최근까지 연장 추정하여 한국의 통합 시장 및 가처분 소득 (Market and Disposable income) Gini 계수의 시 계열을 구성하였다(구성방법에 대해서는 <참고자료 1> 참조). <그림 6>은 이렇게 구성된 한국의 시장 및 가처분소득 Gini 계수 시 계열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참고자료 1> 한국의 통합 Gini 계수 조성을 위한 SWIID (2016)의 한국 Gini 계수와 한국의 가계금융복지 Gini 계수의 통합 추정 식

① 통합 시장 소득 Gini (2017-2022) = 19.8809 + 33.57303*(가계금융복지 시장 소득 Gini) ; Adjusted R²=0.9511.

② 통합 가처분소득 Gini (2017-2022) = 24.5228 + 16.14591*(가계금융복지 가처분소득시장 Gini) ; Adjusted R²=0.7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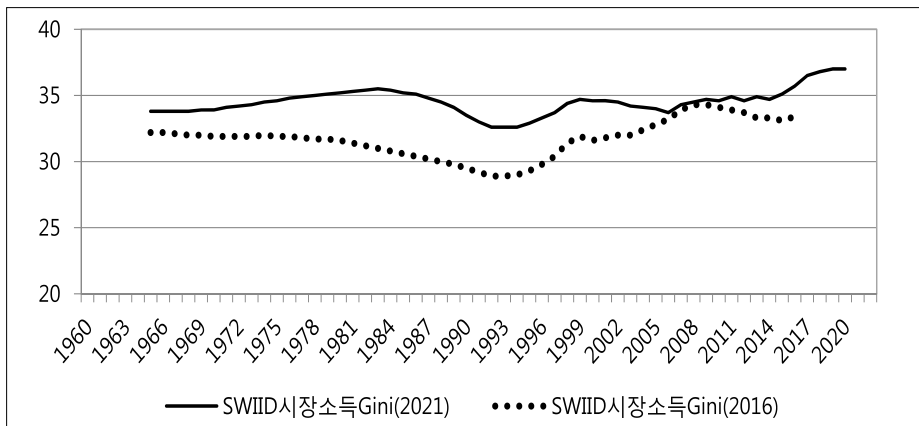
<그림 6> 한국의 시장 및 가처분소득 Gini 계수와 Gini-ratio 추이



〈참고자료 2〉: SWIID Gini의 구 자료(2016)와 신 자료(2021) 비교 및 수정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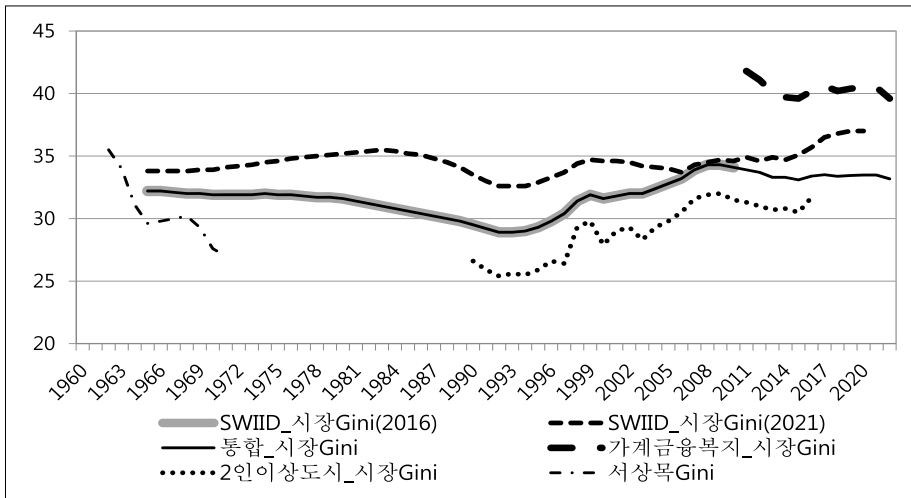
이 연구는 SWIID Gini의 구 자료(2016)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수정 발표된 신 자료(2021)가 구 자료와 현격한 차이가 나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뢰하기가 어려워 위에 설명한 대로 SWIID Gini 구 자료(2016)와 한국의 가계금융복지조사(2011-22) 공식자료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Gini 변수를 조성하였다. 〈그림 7〉이 신구 자료의 한국의 시장 Gini 계수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7〉 SWIID의 한국 Gini 계수 자료 비교



의문①: SWIID Gini 신 자료(2021)의 한국 개발연대 추세가 구 자료(2016)의 분배 개선 추세에서 악화로 역전된다. 무슨 새로운 자료가 있어 60s-70s년대 자료를 정반대 추세로 수정할 수 있을까? 오래된 자료인 서상목(Suh, 1974)이나, 70년 이후 급속히 진행된 도시 농촌 소득의 수렴을 시사하는 새마을운동 성과 자료나, World Bank (93)의 한국 외 40여 개국 중 1965-89년간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을 시사하는 자료 등과도 상치된다. 〈그림 8〉은 그 동안 발표된 주요 한국의 시장Gini 계수 추정치들을 모아 보여주고 있다.

〈그림 8〉 한국의 시장 Gini 계수 모음



70년대 당시 한국정부의 공식자료를 사용한 서상목(Suh, 1974)의 자료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 도시가계조사에 의한 한국의 Gini 계수 추이: 분배 개선; 1962년 0.355, 1963년 0.340, 1964년 0.311, 1965년 0.296, 1966년 0.298, 1967년 0.300, 1968년 0.302, 1969년 0.293, 1970년 0.276, 1971년 0.270

-농촌 가구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별 변동이 없음: 1967년 0.306, 1968년 0.300, 1969년 0.302, 1970년 0.302, 1971년 0.314; 농촌가계조사는 1967년부터 소득 조사를 실시하였다. 농촌의 경우 1970년에 본격화된 새마을 운동 이후 1974년부터 농촌의 가구당 소득이 도시가구 소득을 추월하였다.

의문②: 외환위기 이후도 악화에서 개선으로 역전된다. 외환위기 이후 분배가 개선되었다는 수정은 기존 공식 자료(도시가계소득 Gini) 와도 상반된다.

의문③: 2013-14년 이후의 급격한 분배 악화는 가계금융복지조사 Gini 계열과도 상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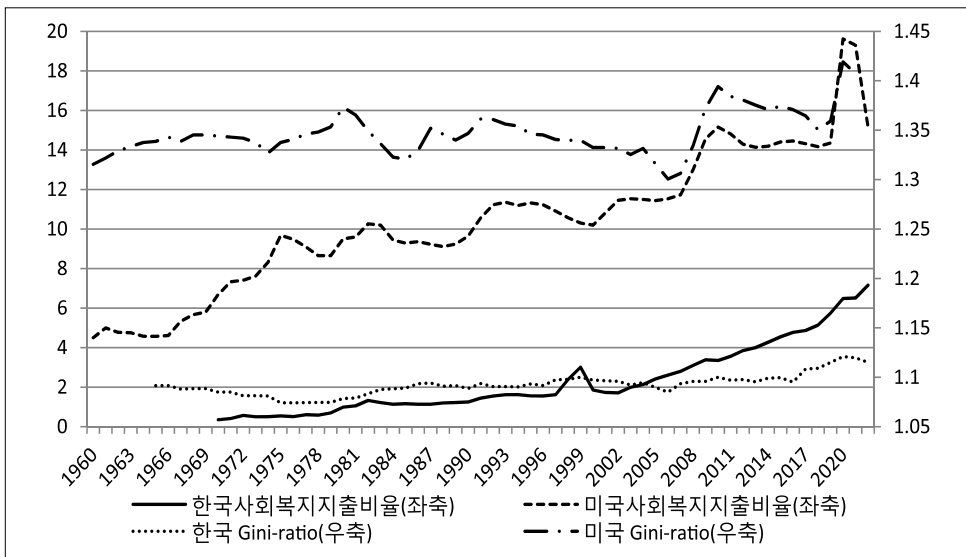
결론: 2021년 이후 SWIID 신 자료의 수정의 타당성이 의심스럽다. 이런 이유로 본고는 SWIID 구 자료(2016)에 표본 수를 2만으로 대폭 확충하여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3개 기관이 합동 조사하여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Gini (2011-22)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6〉은 이렇게 조성된 한국의 시장 소득과 가처분소득 Gini 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다음에 설명하는 Gini-ratio 도 같이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Gini-ratio〉

Gini-ratio는 “시장 소득 Gini/가처분소득 Gini”로 정의되는데, 정부의 복지정책이란 일반적으로 재분배정책을 통해 가능한 한 시장 소득 Gini 계수 보다 낮은 수준의 가처분소득 Gini 계수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Gini-ratio는 바로 정부의 재분배복지재정정책의 강도를 측정한다고 할 수 있다. Gini-ratio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재분배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만큼 가처분소득 Gini 계수가 시장 소득 Gini 계수에 비해 낮고 그래서 가처분소득 불평등 도가 그만큼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의 시장 소득 Gini 계수의 악화에 대응한 재분배복지정책 집행이 시차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Gini-ratio의 일년 시차 변수를 설명 변수로 사용하였다.

아래 〈그림 9〉는 Gini-ratio 변수의 일반적 실용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Gini 계수와 Gini-ratio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Gini-ratio와 각각의 복지재정지출의 대GDP 비율과의 상관 계수는 한국의 경우는 0.88(1969-2021)이고 미국의 경우는 0.67(1969-2020)이다. Gini-ratio가 복지재정정책의 강도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한국(1969-2021)과 미국(1969-2020)의 Gini-ratio 와 GDP 대비 복지재정지출비율



3. 한국경제분석 모델과 결과

(1) 개발 연대와 민주화 시대 분리 추정 모형과 분석 결과

한국에 대한 분석은 두 단계로 했다. 우선 개발 연대와 민주화 시대를 분리 추정한 결과를 보고하고, 다음 단계로 민주화 시대를 더 세분해서 우파 정부와 좌파 정부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를 보고한다. 우선 개발 연대와 민주화 시대 두 체제 분리 모형은 앞의 모형 설명에서 보여준 〈그림 2〉를 원용하여 아래 〈그림 10〉으로 개념화 될 수 있다. 이 개념에 따라 분리 추정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2〉에 보고하였다.

반세기의 경제사를 하나의 동질적인 정치경제체제가 지배했다는 가정하에 통합 모형을 추정하고, 다음에는 50년 동안 개발 연대와 민주화 시대라는 두 개의 다른 체제가 전과 후로 나누어 관리했다는 가정하에 분리 추정한 결과를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보고하였다. 두 결과의 계량경제학적 의미의 차이는 전자의 통합 추정은 개발 연대와 민주화 시대의 경제구조가 같다는 즉, 양 기간의 구조식의 계수가 같다는 제약을 가한 셈이고, 양 기간을 분리 추정한다는 의미는 경제구조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수도 다를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추정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이런 가정들의 타당성 여부는 추정계수들의 유의성을 가지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좌우간 50여년의 장기간 동안 경제구조가 고정되었다고 가정 함은 분명 지나친 단순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추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개발 연대와 민주화 시대의 분기점은 1988년으로 상정하였는데 이는 1987년의 새 헌법하에 88년 대통령직선제를 통해 소위 민주화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형에서 사용할 체제 분리용 더미 변수는 1988년 이후 기간 만을 1로하는 변수이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시 계열 자료의 단위 근 문제로 인한 non-stationarity 방지를 위해 모든 변수를 증가율로 하여 추정하였기 때문에 R^2 도 그렇고 계수들의 유의성에도 다소의 부정적 영향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유의성 판단도 다소 완화하여 평소 기준(90%) 보다 낮은 85%까지도 허용하였다. 결과표에는 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80% 유의성까지도 표시하였다.

우선 53년 전기간 통합 체제 결과는 세계와 미국 결과와 대동소이하다. 기업은 성장친화적이고 분배친화적이다. 기업은 한국의 경우 동반성장 친화적이다. 재분배정책은 반 성장적이면서 분배에는 중립적이다. 노조는 성장과 분배에 중립적이다.

〈그림 10〉 개발 연대와 민주화 시대 분리 추정 개념

	민주화 시대(B) (1988-2021)
개발 연대(A) (1969-1987)	한국경제의 기본 바탕(A)

〈표 2〉 한국의 개발 연대와 민주화 시대의 경제성장과 분배 효과 분석결과

정책목표/ 정치경제 체제 정책 변수	일인당 실질 GDP				시장 소득 Gini			
	통합정치 경제체제	개발연대 (A)	민주화 효과 (B)	민주화 이후 경제구조 (A + B)	통합정치 경제체제	개발연대 (A)	민주화 효과 (B)	민주화 이후 경제구조 (A+ B)
일인당 명목 기업자산	0.069** (2.308)	0.071** (2.334)	-0.026 (-0.681)	0.045** (1.600)	-0.017** (-2.632)	-0.017** (-2.639)	-0.005 (-0.391)	-0.022** (-1.724)
복지재정 지출	-2.746* (-1.881)	1.612 (0.359)	-4.936 (-1.050)	-3.324** (-2.359)	-0.337 (-1.006)	-1.187** (-2.233)	1.144** (1.507)	-0.043 (-0.087)
노조 조직률	0.063 (0.580)	0.326** (1.515)	-0.351* (-1.440)	-0.025 (-0.200)	-0.001 (-0.081)	0.017 (1.064)	-0.030* (-1.378)	-0.013 (-0.685)
Adjusted R ²	0.130	0.193			0.059	0.044		
기간	53 (1969~ 2021)	19 (1969~ 1987)	34 (1988-2021)		53 (1969~ 2021)	19 (1969~ 1987)	34 (1988-2021)	

주: EViews를 이용한 Robust OLS 추정. ()안은 Robust t-값으로 유의성기준은, *** 는 99%, ** 는 95%, * 는 90%, ** 는 85%, + 는 80%수준에서 유의.

그러나 이 결과를 개발 연대와 민주화 시대로 분리해 보면, 개발연대에는 기업은 여전히 강력하게 친 성장적이고 친 분배적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재분배정책을 실시할 여건이 미성숙했던 기간임에도 재분배정책은 성장에는 중립적이고 친 분배적이다. 기업성장과 재분배정책이 세계은행(1993) 자료가 보여주듯 세계최고의 동반성장 시대를 만들었다. 미약한 재분배 기능은 성장에는 중립적이면서 새마을운동 등을 통해 적은 재원으로나마 분배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연대 노조는 유의성이 약하지만 친 성장적이었으나, 민주화 이후 성장이나 분배에 중립적이다. **개발 연대는 기업, 복지정책, 노조 등의 공조 하에 성장과 분배 개선이 가능하여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이 가능하였다.**

한편 민주화 시대에는 기업의 성장 기여효과가 약화되었으며 재분배정책은 반 성장 요인으로 전환되었다. 기업의 분배 개선 역할은 다소 약화되었지만 대체로 동반성장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친 분배적이던 개발 연대의 재분배정책은 민주화 시대에

는 그 기능이 소멸되었다. 전체적으로 민주화 시대에는 기업이나 복지정책이 성장과 분배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소멸되고 있다. 소위 저성장 양극화 현상은 민주화 시대 이후의 현상이다.⁴⁾

(2) 민주화 시대에 대한 상세 분리 추정 모형과 분석 결과

다음으로 민주화 시대를 세분화하여 분리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분리 추정의 개념은 <그림 11>과 같다. 앞에서는 민주화 시대를 경제구조상 동질적인 시대로 가정하였지만, 실제로 민주화 이후 좌우파 정부가 교체되면서 정책 이념도 상의해지고 성과에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반세기 넘는 기간을 두 개의 정치경제 체제로만 가정하는 것, 또한 지나친 단순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이념 성향을 좌우파로 분류하는 이유는 진보, 보수라는 명칭이 이미 호 불호의 가치 판단의 선입견이 개입된 칭호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보다 중립적인 용어를 쓰고자 함이다.) 물론 앞에서 시도한 개발 연대와 민주화 시대로 나누는 것도 방법론상의 큰 진전이지만 이는 민주화 시대 정부들이 같은 이념과 정책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단순화한 셈이기 때문에 여전히 모형에 강한 제약을 가하는 셈이다.

<그림 11> 정치경제 시대별 회귀분석에 대한 개념도

		김대중+노무현 시대(C)		문재인 시대(D)
		민주화 시대(B)	B	B
개발 연대(기본 구조) (A)	A	A	A	A

주: 정치경제체제 구분: 박정희+전두환 시대(19년: 1969-1987)=(A) ; 노태우+김영삼+이명박+박근혜 시대(19년: 1988-1997; 2008-2016)=(A+B) ; 김대중+노무현 시대(10년: 1998-2007)=(A+B+C) ; 문재인 시대(5년: 2017-2021)=(A+B+D).

4) 익명의 논문심사위원은 기업의 성장기여효과(생산성)와 신고전파 성장 회계분석에서의 총 요소 생산성과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피력하였는데, 당장 수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흥미로운 관심이라 생각한다. 생산함수추정 결과를 보면 이 절에서의 개발 연대와 민주화 시대간에는 물론 다음절의 민주화 시대에 대한 상세 분석에 있어서도 기업의 생산성이 개발 연대 이후 계속 하락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로 바뀌기도 하고 유의성도 크게 하락하는데 이는 바로 민주화 이후 총 요소 생산성이 계속 하락해왔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지적에 감사 드린다.

그러나 이런 식의 체제 분리 추정 시 문제는 계량경제학적으로 다중 공선성 문제 때문에 과다하게 여러 체제를 독립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더구나 한국의 민주화 시대는 소위 좌파 정부라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의 연이은 집권 이후 우파라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다음에 좌파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기 때문에 앞뒤 좌파정부간에 10년의 간격이 있어 이 두 기간을 단일한 정치경제 체제, 혹은 같은 경제구조라고 가정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3개 정부를 동질적이라는 가정하에 같이 묶은 추정 실험도 해봤으나 별로 유의한 결과를 발견 못했는데 후술하는 바와 같이 두 기간을 분리한 결과가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분리 추정의 타당성이 큼을 시사한다 하겠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김영삼 정부를 우파라고 하는데 이의를 달 수도 있겠지만 경제정책 측면에서 보면 우파에 가깝지 않은가 생각한다. 이 모형은 우파 민주정부 시대의 효과를 전체 민주화 시대 효과에서 좌파 정부 효과를 분리 추정함으로써 잔여 효과로 파악하는 셈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정치 계보 상 우파가 개발 연대를 이었다는 의미에서 한국경제 구조의 기본 바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며 여기에서 좌파 정부의 한국경제에 대한 새로운 변용 노력을 분리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좌파정부를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를 통합하고 문재인 정부를 독립적으로 다룬 것은 앞에서 지적한 데로 시차가 10년이나 되는 문제도 있지만, 오늘날의 한국경제 구조를 파악하려면 가장 최근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경제 구조를 독자적으로 추정해야 하기 때문에 연이어 집권하고 성격이 비슷한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시대를 같이 따로 묶어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분석결과는 <표 3> 과 <표 4>에 각각 생산 함수와 분배 함수를 보고하였다. 우선 관찰되는 것은 개발연대 기업의 성장과 분배 개선을 의미하는 동반성장계수의 유의성이 앞의 두 체제 분리 모형에 비해 다소 떨어졌지만 다른 주요 변수의 유의성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개발 연대와 우파 민주정부 시대**는 앞의 결론과 동일하다. **개발 연대**는 기업과 재분배 복지정책이 대체로 동반성장 친화적인 반면 **우파 민주정부 시대**는 이 효과가 약화되었지만 앞의 민주화 시대 통합모델에 비해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기업의 분배 개선 효과의 유의성이 개선된다는 점**이다. 노조는 성장이나 분배에 큰 영향을 못 미쳤다.

한편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기업의 동반성장 기능이 소멸되고 오히려 **악화 요인**이 되었고, 재분배 복지 재정의 성장과 분배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였다. 그러

나 노조의 반 성장·반 분배 기능이 뚜렷해졌다. 사실상 김대중·노무현 시대는 경제성장과 분배 개선을 위한 기업부문이나 노조의 역할이나 정부의 재분배 복지 정책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성장과 분배의 동반 약화* 시대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5년은 기업의 성장 기여 효과나 동반성장 기능이 소멸되고 노조의 반 성장 효과가 더욱 뚜렷해진 점 등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와 같으나, 특이하게도, 복지재정정책이 성장과 분배 개선을 주도했다는 점은 크게 다르다.

요약하면 문재인 시대는 기업의 성장 및 분배 개선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노조는 성장에 역행하고 분배에 기여가 없는 김대중·노무현 좌파정부의 특징을 보이면서도 재분배 정책이 경제성장과 분배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경제구조이며, 이 구조가 현재의 한국경제구조라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문 정부 이후의 한국경제구조가 마치 기업 없는 경제(정통적인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체제)처럼 기업 부문의 동반성장 기여를 차단하고 정부의 복지재정만으로 성장·분배를 좌지우지 하는 국가 주도 생산 분배 체제로 이행되었다고 해석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소위 우파 민주 정부나 좌파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와도 다르다. 이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이런 결과의 배경과 향후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표 3〉 한국의 정치경제체제와 경제성장 효과

정책목표/ 정치경제 체제	일인당 실질 GDP 함수의 구조변화 추정							
	통합정치 경제체제	개발연대 (A)	민주화 시대의 경제적 효과			민주화 이후의 한국경제 구조 (A+B)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시대 경제구조 (A+B+C)	문재인 정부 시대 경제구조 (A+B+D)
			민주화 효과 (B)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효과 (C)	문재인 정부효과 (D)			
정책 변수								
일인당 명목 기업자산	0.069** (2.308)	0.053** (1.475)	-0.010 (-0.239)	-0.300** (-1.683)	-0.109 (-1.272)	0.043** (1.470)	-0.257+ (-1.366)	-0.066 (-0.703)
복지재정지출	-2.746* (-1.881)	1.157 (0.258)	-4.986 (-1.056)	-3.064 (-0.584)	5.544*** (3.002)	-3.829** (2.342)	-6.893+ (-1.393)	1.715*** (2.723)
노조조직률	0.063 (0.580)	0.328** (1.450)	-0.268 (-1.098)	-0.317* (-1.863)	-0.588*** (-3.672)	0.060 (0.643)	-0.257** (1.548)	-0.528*** (-5.011)
Adjusted R ²	0.130	0.202						
기간	53(1969~ 2021)	19(1969~ 1987)	34(1988~ 2021)	10(1998~ 2007)	5(2017~ 2021)	34(1988~ 2021)	10(1998~ 2007)	5(2017~ 2021)

주: 회귀분석방법과 계수 유의성에 대해서는 〈표 2〉의 주 참조.

〈표 4〉 한국의 정치경제체제와 소득분배효과

정책목표/ 정치경제 체제	시장 소득 분배 (Gini) 함수의 구조변화 추정							
	통합정치 경제체제	개발연대 (A)	민주화 시대의 경제적 효과			민주화 이후의 한국경제 구조 (A+B)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시대 경제구조 (A+B+C)	문재인 정부시대 경제구조 (A+B+D)
			민주화 효과 (B)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효과 (C)	문재인 정부 효과 (D)			
정책변수								
일인당 명목 기업자산	-0.017** (-2.632)	-0.010* (-1.808)	-0.016** (-1.562)	0.222*** (5.259)	0.035* (1.805)	-0.026** (-2.617)	0.196*** (5.082)	0.009 (0.673)
복지재정 지출	-0.337 (-1.006)	-1.006*** (-2.340)	1.657*** (2.068)	0.923 (0.662)	-1.139* (-1.776)	0.651 (1.010)	1.574 (1.195)	-0.488*** (-5.929)
노조조직률	-0.001 (-0.081)	0.016 (1.199)	-0.044** (-1.665)	0.165* (1.815)	0.036** (1.679)	-0.028* (-1.411)	0.137** (1.624)	0.008 (0.566)
Adjusted R ²	0.059	0.392						
기간	53 (1969~ 2021)	19 (1969~ 1987)	34 (1988~ 2021)	10 (1998~ 2007)	5 (2017~ 2021)	34 (1988~ 2021)	10 (1998~ 2007)	5 (2017~ 2021)

주: 회귀분석방법과 계수 유의성에 대해서는 〈표 2〉의 주 참조.

4. 문재인 정부가 구축한 현 한국경제 구조에 대한 분석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기조는 소위 “소득 주도 성장”이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이 주장은 소위 후기 케인즈 학파(post-Keynesian economics)라는 정부 개입을 당연시하는 케인즈의 거시경제이론에 좌파경제학의 계급적 투쟁을 통한 분배 결정 이론을 혼합한 비주류 좌파경제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Lavoie, 2006; 김정훈, 2016). 시장과 한계 주의 분배 이론을 부정하고 분배 개선은 생산성 문제가 아닌 근로자의 몫에 대한 자본과 노동 간의 계급간 세력 투쟁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좌승희, 1975). 이들은 동어반복적인 거시 내생 변수와 내생 변수간의 계량경제학적 관계를 논거로 하여 노동분배율이 높아지면 오히려 총수요를 증가시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소위 자칭 “비용의 역설”이라는 단순 논리를 앞세워 “임금 주도 성장”이라는 가설을 설파한다. 정부의 개입으로 임금(비용)을 인상시키면 총수요가 늘어 성장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지만 개방경제하에서는 대외경쟁으로 기업의 이윤이 주도하는 성장이 더 우세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한국의 경우는 임금 주도 성장이 더 우세하다는 자신들의 실증 결과를 내세워 임금 인상을 권한다.

이 이론은 다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돈을 그냥 나눠줘서 쓰게 하면 수요가 늘 것이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난다는 생각인데 요즘 기본소득 주장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

이는 케인즈의 불황극복 이론이라 할 수 있는 총수요 결핍 불황경제에서는 땅을 파고 다시 덮든 무엇이든 일을 시켜 혹은 극단적으로 그냥 이 라도 돈을 나눠줘서 쓰게 하면 총수요가 증가하여 불황 탈출이 될 수 있다는 주장(마중물 정책: pump-priming policy)과 일맥상통한다. 소득이 애초에 어떻게 창출되는 지에는 관심 없고, 소득을 늘려주면 이 돈이 지출되니 결국 수요가 창출되어 생산이 따라 늘고 소득이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정책 실험 결과 이런 정책은 미국의 70년대 케인즈 소득 정책(Keynesian incomes policy)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하여 재정적자만 쌓이고 인플레이를 초래하여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어쨌든 문 정부는 이 이론 하에 광범위한 취로사업 등 직접 고용창출 정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과도하다고 비판 받는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통해 중소 제조·서비스업 근로자 임금을 강제로 인상하여, 인위적으로 소득 성장과 분배 개선을 도모하였다(아래 <그림 12, 13, 14, 15> 참조). 이와 동시에 신 자유주의 비판자들이나 더 나아가면 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념에 경도되어 재벌 등 대기업을 분배 악화의 원인 제공자로 치부하거나 아니면 주류경제학의 비현실적인 완전경쟁 모형에 심취하여 이 모형에 맞지 않는 재벌 대기업을 무조건 독점기업으로 치부하여 규제해야 한다는 소위 반 대기업 이념논자들이 - 여기에는 여야 정치권과 일부 언론도 포함된다 - 대기업 규제를 더 강화하자거나 심지어 재벌을 수백의 소기업으로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백가쟁명(百家爭鳴)식으로 등장하였다. 1987년 정치 민주화 이후 재벌 청산의 깃발을 내건 이후, 97년 외환위기 때는 외환위기라는 정책 실패의 희생 기업들을 위기 책임자라는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 놓은 주장으로 소위 대기업 개혁을 한 이후, 문재인정부의 대기업 청산론과 규제는 가히 재벌규제 역사와 정책의 정점을 찍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성장과 분배 개선이 기업의 통상적인 동반 성장 기능임을 - 이를 가르치는 경제학은 아직도 없다 - 전혀 인지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하고, 인지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검토해볼 이념적 여유도 없었던 그 동안의 소위 우파 민주 정부, 좌파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물론 더 극단화된 행태를 보인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모두 기업의 동반성장 기능을 왜소화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더구나 노조의 반 성장 효과가 문 정부에서 유독 높은 유의성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전투적인 노조가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확대를 통해 보다 동반성장 친화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유인을 약화시켰던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의 정점에 이른 문재인 정부는, 재벌 대기업은 청산대상이니 그리

고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전경련도 무력화되었으니, 이제 아예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이 원하는 더불어 잘사는 동반성장 경제를 만들어 보겠다는 결연한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기업으로부터 상응하는 조세 수입을 필요로 하는 통상적인 재분배 복지재정 지출이 아니라, 적자재정, 국가부채로 쉽게 자금을 조달하면 부양한 경제가 단기적으로 구축효과 없이 “소득주도 성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구나 코로나 사태로 이런 정책의 정당성도 쉽게 확보할 수 있으니 아주 좋은 정책 아이디어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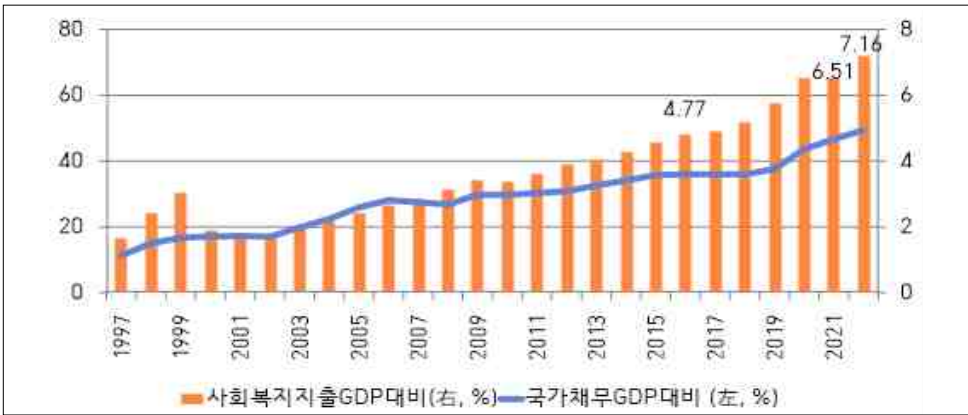
그러나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시도한 이런 정책에 의해 구조가 변형된 한국경제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다. 필자들의 생각으로는 정부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누적으로 이러한 구조의 지속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아래 그림들이 정부회계상의 복지 지출과 재정수지와 국가부채 현황들을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문재인 정부 5년간은 한국 역사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높은 사회복지 지출(대GDP비율) 증가(〈그림 12〉), 국가채무(대GDP비율) 증가(〈그림 13〉), 재정수지 적자 증가(〈그림 13〉)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물론 이후의 어느 정부도 이 추세를 오래 끌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자본주의 기업의 막중한 동반성장 기능을 무시하고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유례없이 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회주의와 같이 기업 부문에 대한 명령을 통해 시장분배 개선에 직접 개입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그림 14, 15〉 참조). 최저임금은 문자 그대로 최저임금이어야 고용과 분배의 시장결정 메커니즘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최저임금 층의 복지에 기여한다는 근본 취지를 벗어나 인위적으로 시장 분배를 결정하는 수단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 부문의 성장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함이 없이 최저임금 정책을 보편적 분배개선 수단으로 활용하는 대중요법이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의 고용과 생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 이 문제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하지만 - 지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아마도 후기 케인즈 학파라는 사람들의 임금주도성장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그 영향률(〈그림 15〉 참조)은 최저임금 제도를 시장분배 개선의 보편적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런 추세는 이명박 정부 말에서 박근혜 정부에 걸쳐 경제민주화가 우파 정당의 깃발로 등장하면서부터 그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그림 1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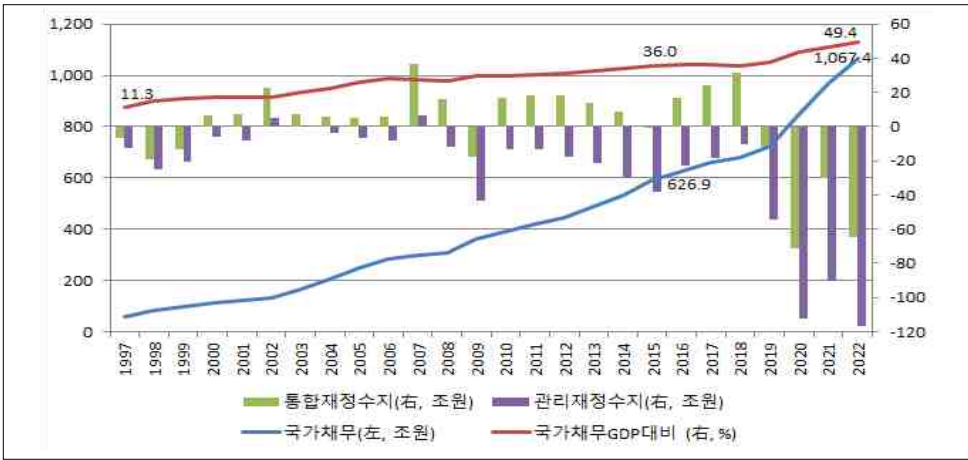
어쨌든, 이 연구의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의 하나는 정치민주화 이후, 그리고 중국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이후 현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징은 국가 재정적자 및 최저임금

인상 주도 성장과 분배 체제로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돌연변이 체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 경제 구조를 자본주의 기업 주도 동반성장 경제로 개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자본주의 기업 주도 동반성장은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이며 한국의 개발연대 한강의 기적의 원천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동안 한국이 무비판적으로 모델로 삼아온 소위 서구 선진국들도 오늘날 예외 없이 저성장·양극화에 직면하고 있음과 그 원인 또한 반 기업과 과잉재분배복지 정책의 결과임을 직시하여(Jwa, 2024b; Jwa and Lee, 2025), 더 늦기 전에 반성적 정책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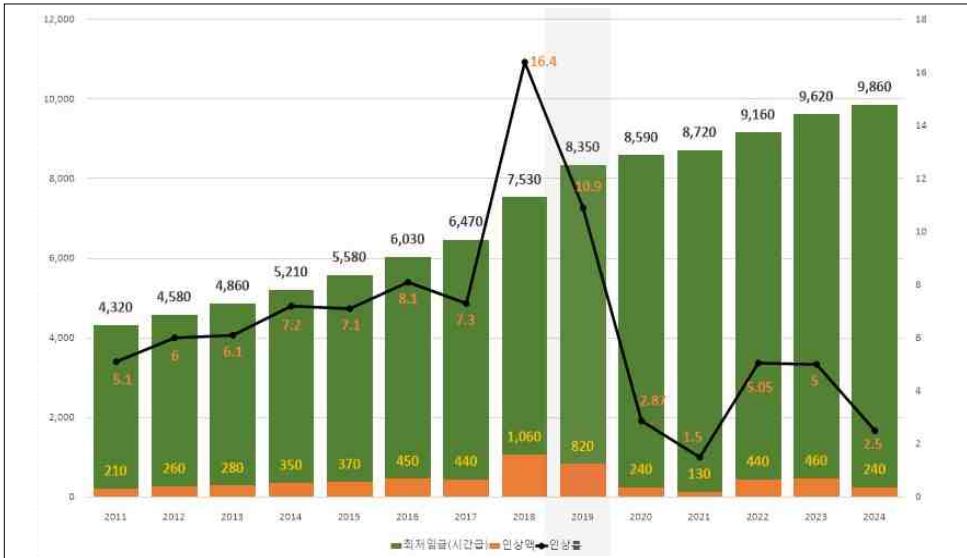
〈그림 12〉 한국의 사회복지지출과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



〈그림 13〉 한국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추이



〈그림 14〉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추이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그림 15〉 최저임금 영향률(1인 이상 전 산업)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VII. 저성장·양극화 탈출을 위한 기업 정책의 새 패러다임

다수의 동일한 경제주체의 존재를 전제조건으로 가정하는 완전경쟁시장 모형에 경도된 대부분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기업의 규모가 커지는 것에 대한 태생적인 거부감

을 갖고 있다. 이들은 아마도 본고의 논지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기업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기업 경제”라는 개념 자체에 거부감을 느낄 것이다. 신 자유주의 경제학의 거두라는 하이에크나 많은 신 고전학과 경제학자, 그리고 지식인과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독점기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런 점에서 Schumpeter(1950) 나 Demsetz(1974) 와 Alchian and Allen(1977)의 주장은 상당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우선 Schumpeter는 동일한 비용함수를 기준으로 경쟁기업과 독점기업의 효율성을 따지는 시장모형은 출발부터 잘 못됐다고 하였다. 보통의 경쟁기업과 혁신을 통해 성장한 대기업은 근본적으로 다른 비용함수를 가지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전통적인 독점이론은 잘 못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Demsetz와 Alchian and Allen 은 독점은 정부의 진입 규제를 통한 보호나 또는 자체의 효율성으로 성장한 대형화(conglomeration)로 인해 생길 수 있는데, 독점이 효율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시장진입이 자유로운 상황에서는 경계를 가질 이유가 없으며 반면에 정부보호로부터 비롯된 독점은 적극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기업이 경제력을 남용할 능력(ability to abuse economic power)과 이를 실제로 남용할 유인(incentive to abuse economic power)은 전혀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단히 중요하고 통찰력이 있는 인센티브 경제학의 기본 명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혼동하는 기업이론이나 정책이 너무나 남용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기업정책의 요체는 성장유인은 극대화하되 경제력 남용 유인을 극소화하는데 있다.

경제력은 효율적이고 강한 능력 있는 기업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러나 이 힘은 또한 항상 남용될 소지가 있다. 어떻게 남용의 유인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것인가가 기업정책이 지향해야 할 바이다. 그런데 실제적 혹은 잠재적 경쟁자의 존재는 경제력 남용의 유인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견제 장치임은 경제학의 상식이다. 정부가 이념적, 정치적 고려에 따라 진입 장벽을 세우지 않는 한, 경제력 남용의 동기는 보다 강한 경쟁 압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제어될 수 있다.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이 우려된다면 대기업 영위 업종에서 인위적 독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입 장벽을 없애 상호 견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 간 실제 담합을 규제하는 것은 물론 담합을 초래할 수 있는 업계의 각종 조합, 단체 활동이 담합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소위 정부가 나서 업종 전문화니 뭐니 하며 소위 재벌들의 상호 진입을 차단해주는 정책은 사실상 독점을 보장해주는 하지하책(下之下策)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 사상과 정책은 대기업 부문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부문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보호 일변도의 중소기업 정책은 유 무형의 진입 장벽을 만들고 이는 경쟁을 저해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유인을 약화시킨다.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기존의 성과에 관계없이 1/N 로 평등하게 지원하는 평등주의 정책에서 경제적 차별화에 기초한 성장 유도 정책으로 전환하여 하루빨리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여 대기업 부문에 새로운 경쟁 압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경제적 차별화 정책”이라는 개발연대 20여년 만에 중소, 중견기업들을 재벌로 키워낸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성공 노하우를 재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크기, 분야, 지역에 따른 비정상적인 투자 규제 장치들도 모두 털어내어야 한다. 이것도 충분치 못하면 내수 독과점 부문에 보다 적극적인 해외 우수 기업 유치 전략을 채택하여 추가적인 잠재 경쟁 압력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제력 남용 유인 억제와 경쟁 촉진 정책으로 기업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면 최고조의 경쟁 압력 하에 기업 부문에 성장의 유인을 극대화할 수 있고 나아가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을 살려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민주화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 아예 기업의 성장 자체를 차단함으로써 오랫동안 경제성장 정책과 양극화의 씨앗을 키워 왔으며 동시에 국내 독과점을 오히려 조장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의 완화에는 실패한 것이다. 정부가 재벌대기업 경제력 집중 완화라는 미명하에 지역, 크기, 분야에 따른 차별적 기업투자 규제정책을 지속한다면 한국경제 성장 동력을 살려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규제회피를 위한 기업의 대 정치, 대 정부 로비와 이로 인한 기업과 정치와 정부 간의 유착 문제에서 해방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 같은 기업정책으로 인해 앞에서 실증 분석 결과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한국경제는 지난 80년대 후반 이후 동반성장의 역동성을 상실해 왔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그 정상을 경험한 셈이다. 한국경제의 성장 계기(契機)를 다시 확보하려면, 대기업 집단의 사업 분야에 보다 실제적·잠재적 경쟁 압력을 높이고 중소기업 정책에 있어서도 안주하는 기업보다 성장하려는 기업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하여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여 대기업 영위 사업 분야에 경쟁 압력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아직도 잔존하는 거의 세계 유일의 재벌 대기업 경제력 집중 규제 패러다임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는 것이 저성장·양극화의 함정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남아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VIII. 결어: 요약과 정책 시사점

마지막으로 본고의 요점을 정리하고 정책 시사점을 논하고자 한다.

1. 논문 요약

이 논문은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 현상의 원인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는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에 기초하여 자본주의 경제를 기업이 주도하는 기업경제로 해석하고, 이 가설 위에서 거시경제 성장과 분배를 설명할 수 있는 계량경제학적 분석 모형을 구축하여 한국경제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논문은 시장의 본질적인 기능은 경제적 성과에 따른 차별적 선택 기능인 “경제적 차별화”에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발전의 동기가 만들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현실시장의 미흡한 차별화 기능을 보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이라는 조직이 발명되어 경제적 차별화 기능을 주도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그리고 정부가 이러한 시장과 기업의 차별화 기능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농경사회의 경제 정체를 극복하여 고차원적인 경제발전 현상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과 분배를 주도하는 핵심 주체로서, 기업의 성장은 경제성장과 분배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경제의 기본명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정치)가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 시장이나 기업의 차별화 기능을 위축시키면 경제의 성장과 분배 또한 위축된다는 역명제가 도출된다.

이 논문은 이런 가설을 세계경제와 미국경제에 대해 검증한 저자 좌승희의 전작(前作)들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에 대해 검증하였다. 세계나 미국경제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도 이 두 명제가 실증적으로 지지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저성장·양극화 현상은 모든 경우 기업이 아니라 경제적 차별화 원리에 역행하는 정부의 복지국가 형 재분배 정책에 기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동안 경제 불평등이 기업과 시장의 책임이라는 국내외 자본주의 비판가들의 주장은 지지되지 않았다. 한편 한국의 경우 최근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위의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과 보편적 특성에 역행하는 유사 사회주의적 경제구조가 정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학계와 정부,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경제정책 대응 방향

이하에서는 연구결과의 정책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1) 기업정책: 개발연대 경험했던 기업의 동반성장 기제를 회복하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성장 규제와 중소기업에 대한 역 성장 인센티브적 규제제도들을 철폐하고, 중소기업의 대기업으로의 성장동기를 극대화하여 기업 성장을 통한 “임금소득 상승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중견, 대기업으로의 성장 신화인 한강의 기적을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중소, 대기업을 가리지 말고 성장하는 기업들이 존중 받고 경제적으로 역차별 받지 않는 시장 본연의 경제적 차별화 유인 제도를 복원시켜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기업의 동반성장기능을 복원하여야만 모든 국민을 중산층화하고 저성장·양극화 함정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2) 재분배 복지제도: 재분배 복지제도의 반 성장·반 분배 인센티브 효과를 방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제도를 경제적 차별화 원리에 기초한 성장 유도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모든 국가의 지원 정책은 국가 지원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돕는 자조정신으로 지원대상에서 벗어나려는 국민을 더 우대하는 차별적 지원정책으로, “정부의 지원이 개인의 성장과 발전의 도약대”가 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재분배 복지제도를 강화하더라도, “새마을운동의 차별적 인센티브를 통한 성공원리”를 적극 활용하여 모든 국민들이 복지 수혜를 스스로 돕는 성장의 사다리 타기로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⁵⁾ 차별적 인센티브 제도가 결여된, 개인의 자조적 성과를 무시하는 평등한 기본소득 지원은 모든 국민을 태업(sabotage)으로 유도하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은 바로 국민적 태업의 결과임을 잊으면 안 된다.

3) 노조활동: 분배에 대한 개선 효과는 없이 반 성장 요인으로 등장한 노조의 역할을 친 성장과 근로자 모두의 분배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 노조의 생태계를 친 성장·친 분배 구조로 재 탄생시키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3. 한국의 정치경제 체제의 특징과 문제점

이하에서는 이 연구에서 확인된 한국정치의 반 성장·반 분배적 성향에 대한 개선

5) 새마을운동의 성공원리에 대해서는 좌승희(2020)와 Jwa(2024a) 참조.

이 모든 경제정책 개혁의 선행조건이라는 실증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몇 가지 정치권의 반 기업과 반 시장적 성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1) 한국의 정치경제 체제는 자유민주주의라 하지만 그 내용은 경제평등주의와 지역균형 이념을 앞세운 평등민주주의로 변질되고 있다. 개발연대 권위주의적이지만 동반성장 친화적인 진성 자본주의 정치경제 체제에서 지난 30여 년간 정치 민주화를 통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유민주주의라기 보다 경제적으로 저성장·양극화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평등민주주의 체제가 정착되었다. 경제평등 이념을 내건 정치체제가 국민들의 태업을 조장해 왔다. 재분배 복지제도가 성장과 분배 모두를 악화시키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를 증명하고 있다.

2) 헌법 119조①항에 보장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경제 질서가 정착되도록 경제제도와 정책을 혁신해야 한다.

헌법상의 경제체제 선언인 119조는 2개의 항으로 구성된다.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여기서 ①항은 1987년 개정 시 기존 조항(제111조 ①항)의 “개인”에 “기업”이 추가되었다.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존중 받을 권리를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헌법적 기본권으로 동등하게 인정한 셈인데 이는 세계 헌법역사에 유례없는 선각자적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성공적인 기업주도 경제발전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일 수도 있어 보이는데, 특히 본고의 이론과 실증 분석 결과가 강력 시사하는 자본주의 기업 경제 관점과도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조항을 대한민국의 “**기업권리장전**”이라 불러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향후 정치권이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의 차원 높은 경제 질서 비전을 바로 인식하고 그 동안의 반 기업적 정책 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②항은 3째 구절의 “경제의 민주화”라는 용어 때문에 소위 경제 민주화 조항이라 불리고 있다. 그 동안 좌파 성향의 정치권이나 일부 학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민주화 논자들은 ②항을 경제 민주화 선언이라고 해석하고 이를 ①항의 기업권리장전에 대한 제한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업규제의 명분으로 내세워 왔다.⁶⁾ 그러나

6) 경제민주(주의) 화란 민주주의정치가 일인 일표의 형식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려

1987년 헌법개정 당시의 헌법개정 특별 소위 위원장은 87년 헌법에 대한 해설서(현경대, 1988)에서 “경제의 민주화”를 그 동안의 정부주도 경제운영에서 탈피하여 기업과 근로자 등 민간역할을 중시하는 민간주도의 “경제운영의 민주화”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정부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보다 자율화한다는 의미로, 기업활동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①항의 기업권리장전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저자 좌승희의 연구(2024)에 의하면 경제민주화 논자들의 주장처럼 ②항을 경제 민주화 선언으로 해석하는 것과 또한 이 선언이 ①항을 제한한다는 해석 모두가 헌법오독이거나 왜곡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이들이 주장하는 경제 민주화의 이념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정의와 균형발전” 이념은 재헌 헌법에서부터 이미 경제 질서로 수용되어왔으나 그 후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완화된 형태로 119조 ②항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①항에 새로 도입된 기업권리장전을 제한하기 위해 ②항이 도입되었다는 주장은 도입의 선후관계로 볼 때 잘 못된 해석이다, 오히려 기업권리장전은 그 동안의 과도한 사회정의 및 균형발전 이념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자율화 선언으로 해석함이 더 타당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권은 헌법 제119조②항의 “**민간주도 경제운영**”이라는 “**경제운영의 민주화와 자율화**” 선언을 반시장적, 반기업적 “경제 민주주의화”로 오독(誤讀)하는 정치적 문맹(文盲)의 폐습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경제민주화 논리에 매몰되어 ①항의 **기업권리장전**을 방기해온 정치권의 기업 규제 입법 성향도 위험적 소지가 없지 않으리라고 판단된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가 119조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신중한 재해석에 나서야 하리라 생각된다. 특히 정치권의 각성이 요구된다.

3) “기회의 평등”개념의 문제점: 그 동안 사회정의의 대명사처럼 여기던 “결과의 평등”이 사회주의 이념과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이제는 그 대신 “기회의 평등”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결과의 평등이나 기회의 평등은 모두 시장의 (차별화) 기능에 역행한다. 경제적 결과는 물론 기회 또한 경제재(經濟財)이지

면 경제적 결과의 평등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정치경제학계의 민주주의 지상논자들의 주장이다 (Dahl, 1985). 한국에서는 김종인(2012) 전의원 등 좌파성향의 정치권과 일부 학계가 119조 ②항의 셋째 구절의 “경제의 민주화”를 앞뒤 맥락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경제민주화 선언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기업규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을 경제민주화 논자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이런 주장에 대한 반론에 대해서는 한국경제연구원(2012)과 좌승희(2024)를 참조하기 바란다.

정부가 그냥 나눠줄 수 있는 공공재(公共財)가 아니다. 기회야 말로 - 때때로 운칠 기삼이 작용하기도 하지만 - 각자가 노력과 비용을 지불해서 시장에서 확보해야 하는 경제적 재화다. 따라서 자유 시장경제, 혹은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국가나 사회가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필요는 있겠지만, 기회를 균등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단지 “법 앞의 평등”만이 시장과 양립할 수 있으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야 말로 정부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적 평등사상을 시장경제 영역에 적용해야 한다는 무분별한 평등사상을 경계해야 한다.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채택하고 있는 일인 일표의 정치적인 평등사상은 시장의 경제적 차별화 기능과 양립할 수 없다. 경제적 성과의 차이를 인정하는 차별화 정의만이 시장경제에 부합하며 이를 일컬어 경제적 정의라 할 수 있다. 일인 일표 식의 정치적 평등사상을 경제에 강요하는 것은 결과나 기회의 평등을 강요함과 다름없기 때문에 시장경제와 자본주의경제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오늘날 전세계가 빠진 저성장·양극화의 원인이 바로 경제적 결과 혹은 기회평등 이념에 입각한 복지국가 이념에 있음을 직시하여 시장의 경제적 차별화 원리를 존중하는 시장민주주의로 복귀하여야 한다. 21세기 세계 경제패권의 향방은 어느 나라가 “경제의 정치화”에서 벗어나 오히려 “정치를 경제화”하는 시장(차별화) 민주주의를 보다 견고하게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 참 고 문 헌

1. 김정훈, (번역), 『포스트 케인스학과 경제학 입문: 대안적 경제 이론』 (원저자; 마크 라부아), 10월, 후마니타스(주), 대한민국: 서울, 2016.
2. 김종인, 『지금 왜 경제 민주화인가』, 동화출판사, 대한민국: 서울, 2012.
3. 변상진, (번역), 『자본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 (원저자: 조셉 슈페터), 한길사, 대한민국: 서울, 2011.
4. 이승만, “공산당 당부당,” 『태평양 잡지』, 3월호, 1923.
5. 좌승희, 『한계주의 분배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자본개념의 허구성과 신고전파적 순환론의 진상』, 9월,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학위 논문, 1975.
6. —, 『신 국부론』, 굿 인포메이션, 대한민국: 서울, 2006.
7. —, 『박정희 살아있는 경제학』, 백년 동안, 대한민국: 서울, 2014.
8. —, 『새마을운동은 왜 노벨상 감인가?』, 청 미디어, 대한민국: 서울, 2020.
9. —, “자본주의선언: 자본주의경제는 기업경제다,” 『한국경제포럼』, 제14권 제1호, 한국경제학회, 2021a.
10. —, “박정희 경제학: 한국적 경제발전 이론과 정책,” 『제도와 경제』, 제15권 제4호, 11월,

- pp. 37-90, (사) 한국제도·경제학회, 2021b. <https://doi.org/10.30885/RIE.2021.15.4.037>
11. _____, “대한민국 기업권리장전(企業權利章典)인 헌법 제119조의 오독(誤讀)과 오해(誤解)에 대한 소고,” *제도와 경제*, 제18권 제4호, 11월, 2024, pp. 1-31, (사) 한국제도·경제학회.
 12. 좌승희·김창근, 『이야기 한국경제』, 도서출판 일월담, 대한민국: 서울, 2010.
 13. 한국경제연구원, 『경제민주화의 함정』, 대한민국,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2012.
 14. 현경대, 『신 헌법』, 박문각, 대한민국: 서울, 1988.
 15. Acemoglu, Daron, and James A. Robinson,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NY: Random House, 2012.
 16. Alchian, Armen A., and William R. Allen, *Exchange and Production: Competition, Coordination, and Control*, 2nd edition,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77.
 17. Alchian, Armen A., and Harold Demsetz, “Production, Information Costs and Economic Organization,” *In Economic Forces at Work: Selected Works by Armen A. Alchian*, Indianapolis: Liberty Press, pp. 73-110, Originally Published (1972) i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2, No. 5, 1977[1972], pp. 777-795.
 18. Banerjee, A., and E. Duflo, “Foreword,” *World Inequality Report 2022*, p. 3, 2022 ABHIJIT V. BANERJEE is a Ford Foundation International Professor of Economics at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9. Chandler, Alfred D., Jr, *The Visible Hand: The Managerial Revolution in American Business*, Cambridge, MA, USA and London, UK: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77.
 20. Coase, Ronald,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Vol. 4, 1937, pp. 386-405.
 21. Dahl, Robert, *A Preface to Economic Democracy*, Berkeley and Los Angeles, California, US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22. Demsetz, Harold, “Two Systems of Belief about Monopoly,” in Harvey J. Goldschmid, H. Michael Mann and J. Fred Weston (eds), *Industrial Concentration: The New Learning*, Boston, MA: Little Brown, 1974, pp. 164-184.
 23. Harvey, David,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24. Jwa, Sung-Hee, *A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Towards a Capitalist Manifesto*, Cheltenham, UK/ Northampton, MA, USA: Edward Elgar Publishing Ltd, 2017a.
 25. _____, *The Rise and Fall of Korea's Economic Development: Lessons for Developing and Developed Economies*, Cham, Switzerland: Palgrave-Macmillan, 2017b.
 26. _____, “Achieving the Shared Economic Growth,” *Pakistan Development Review*, Vol. 57, No. 2, Summer 2018.
 27. _____, “Theory and Empirics of the Institutional Evolution of Economic Development: Application to Korean Economy with Empirical Verification,” *Seoul Journal of Economics*, Vol. 33, No. 2, Summer 2020.
 28. _____, “What Made Possible the Korea's Economic Miracle? : Park Chung Hee's Economization of Politics, Economic Discrimination and Corporate Economy,”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Vol. 17, No. 1, February 2023, pp. 1-38, Korea Institution and Economics Association. <https://doi.org/10.30885/RIE.2023.17.1.001>.

29. _____, "Korea's Saemaul Undong Revisited as Rural Development Game for Poverty Eradication: A New Development Economics Perspective," *The Pakistan Development Review*, Vol. 63, No. 1, 2024a, pp.19-44. Retrieved from <https://thepdr.pk/index.php/pdr/article/view/3260>.
30. _____, "What Causes Polarized Stagnation, Corporate Economy, or Welfare State?: Insights from New Development Economics," *Economics & Politics*, 2024b, pp.1-33. <https://doi.org/10.1111/ecpo.12316>Jwa.
31. Jwa, Sung-Hee, and Taekyu Lee, "Economic Stagnation and Inequality: A New Development Economics Perspective," *Digital Econom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Vol. 3, No. 10, 2025. <https://doi.org/10.1007/s44265-025-00056-7>.
32. Lavoie, Marc, *Introduction to Post-Keynesian Economics*, Palgrave-Macmillan, The USA: NY, 2006.
33. Maddala, G. S., *Econometrics*, The USA: McGraw-Hill, Inc, 1977.
34. Piketty, Thomas,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4.
35. Schumpeter, Joseph,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Harper & Row, 1950[1942].
36. Simon, Herbert, "Organizations and Markets,"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5, No. 2, 1991, pp.25-44.
37. Solt, Frederick, "The 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 *Social Science Quarterly*, Vol. 97, Issue 5, Nov. 2016, pp.1267-1281.
38. Suh, Sang Mok, *The Determinants of Personal Income Distribution and Its Relationship to Aggregate Saving and Employment with An Application to the Korean Economy*, Ph.D.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March, 1974.
39. Summers, Lawrence H., "US Economic Prospects: Secular Stagnation, Hysteresis, and the Zero Lower Bound," *Business Economics*, Vol. 49, No. 2, 2014, pp.65-73.
40. _____, "The Age of Secular Stagnation: What It Is and What to Do About It," *Foreign Affairs*, March/April, 2-9, 2016.
41. World Bank,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Who's Responsible for Korea's Worsening Growth and Distribution: Business or Politics?

Sung-Hee Jwa* · Sung Jong Cho** · Taekyu Lee***

Abstract

This paper aims to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analyze the causes of low growth and polarization in the Korean economy. The paper argues that the essential function of the market is “economic differentiation,” which is a differential selection function based on economic performance and creates the motiv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in the capitalist economy, the organization called corporation was invented to supplement and strengthen the insufficient differentiation function of the actual market due to incomplete information, and proactively practices the economic differentiation function, and the government actively provides policies and institutions to encourage this differentiation function of the market and corporations, thanks to which the economic stagnation of the agricultural society was overcome, and high-level economic development became possible. According to this theory, corporations are the key players that lead the growth and distribution of the capitalist economy, and the fundamental proposition of the capitalist economy is that the growth of corporations can improve economic growth and distribution. The paper tested this hypothesis on the Korean economy based on the author (Jwa)'s previous works that tested this hypothesis on the world economy and the US economy. It was confirmed that the phenomenon of low growth and polarization is caused not by the corporate economy but by the government's anti-corporate policy and welfare state-redistribution policy that runs counter to the principle of economic differentiation. The claim of domestic and foreign critics of capitalism that economic inequality is the responsibility of companies and the market has not been supported.

Key Words: a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apitalist corporate economy, Korea's economic stagnation and inequality

JEL Classification: B4, C5, D3, O1, O43, O47, P1

Received: March 31, 2025. Revised: April 21, 2025. Accepted: April 25, 2025.

* First and Corresponding Author, Visiting Professor/Ph. D. in Economic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jou University, 206, World cup-ro, Yeongtong-gu, Suwon-si, Gyeonggi-do 16499, Korea, e-mail: jwa4746@naver.com

** Co-Author, The Former General Director of the Economic Statistics Department at the Bank of Korea, 39, Namdaemun-ro, Jung-gu, Seoul 04531, Korea, e-mail: sungjongc@gmail.com

*** Co-Author, Senior Research Fellow/Ph. D. in Economics,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46FL, FKI Tower, 24, Yeoui-daero, Yeongdeungpo-gu, Seoul 07320, Korea, e-mail: tklee@fki.or.kr